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KINU 정책연구시리즈 24-02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황수환·장철운·홍철기

KINU 통일연구원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4-02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연구책임자 : 황수환(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공동연구자 : 장철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홍철기(통일연구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 부연구위원)
연 구 지 원 : 이지은(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행정원)

KINU 통일연구원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4-02

발 행 일	2024년 9월 11일
저 자	황수환, 장철운, 홍철기
발 행 인	김천식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기획조정실장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8
홈 페 이 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 쇄 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 S B N	979-11-6589-174-9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2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약 ····· 7

Ⅰ. 서론 ····· 9

Ⅱ.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주장 배경과 논리 ····· 17

1. 배경 ····· 19
2. 논리 분석 ····· 36

Ⅲ. 민족주의 개념의 재검토와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 ····· 45

1. 민족주의 개념과 연구의 비판적 기원과 변화 ····· 47
2. 민족주의 개념의 다의성 ····· 62
3. 민족 동질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적 보편 가치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필요성 ····· 72

Ⅳ.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반박과 대응 ····· 77

1. 반박 ····· 79
2. 북한의 향후 조치사항 전망 ····· 87
3. 대응방안 ····· 97

Ⅴ. 결론 ····· 109

참고문헌 ····· 11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21

표 차례

〈표 Ⅲ-1〉 20세기 반전체주의론과 한국 자유민주주의 통일담론에 있어서의 정체성의 세 가지 차원 비교 ····· 53
〈표 Ⅳ-1〉 북한 당규약에 규정한 당의 목적(1946~2021) ····· 84
〈표 Ⅳ-2〉 김정은 공개활동 세부 동향: 2020년 이후 매년 12월~차년 5월 ··· 89
〈표 Ⅴ-1〉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이유, 반박, 대응방안 ····· 113

요 약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에 대한 이유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반통일적,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일방적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유는 첫째, 남한과의 체제경쟁 실패를 자인 둘째, 북한 주도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불가능 셋째,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정세판단 넷째,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민족 부정론은 대남·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전환을 꾀하는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북한 역사와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 등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논리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 주민 대부분이 모두 한민족이라는 동일한 혈통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한순간에 부정한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취약하다. 한민족 부정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 적대감·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의존을 약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역사적·현실적·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박의 논리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은 반통일적이고 역사적 착오이자 자기부정적 모순이다. 비록 분단된 상황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 간 관계의 단절은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일 뿐이다.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한국과 미국에게 책임전가할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정책적, 정세적 판단의

요 약

오류로 인식해야 한다. 분단체제로 인한 다양한 폐해와 모순들과 남북 간 상호 적대성, 폭력성을 지닌 악순환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형태의 특수관계로서 남북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주제어: 한국, 북한, 통일, 국가, 한민족

Ⅰ. 서론

북한은 2023년 12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통해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하며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1] 김정은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기존 북한 헌법에 없는 '영토조항'을 신설할 것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각종 상징물에 대한 철거를 지시하면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2]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한 남북관계의 성격과 내용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물론 분단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의 일반적인 성격들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 간 특수관계라는 입장뿐만 아니라 2000년, 2007년, 2018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상합의문 및 기존 남북 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모두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은 향후 북한식의 적대적이고 공격성이 강화된 남북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하기 이전에도 한국과 멀어지려는 조짐은 김정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존재했다. 2015년 8월 15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30분 시차를 선언한 '평양 시간' 사건, 2023년 7월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 방북 계획과 관련하여 통일전선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아닌 외무성 국장 명의로 거부한 사건, 2023년 7월 10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문," 『로동신문』, 2023. 12.31.
2) "80년 북남관계 종지부," 『조선중앙통신』, 2024.1.16.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뒤 강순남 국방상, 최선희 외무상 등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건 등이 있다. 대한민국 호칭의 경우 2023년 12월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 이후에는 인용이나 강조 차원의 쌍꺽쇠(《》) 조차도 삭제하였고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도 삭제했다. 또한 2017년 11월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민족보다 국가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작년 10월 2일 항저우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괴뢰'로 지칭하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당시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남북관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기에는 지엽적인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한 만큼 단순 전술적 전환이 아닌 전략적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의 변천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북 간 상황에 따라 전술적인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에 정권을 수립한 지 약 2년만인 1950년 6월 25일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북한은 1950년대 이른바 '민주기지론'을 내세웠다. 이는 북한 지역을 우선 민주기지로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통일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자주적 총선거' 실시와 통일 이전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우위가 1960년대 점차 약화되고 1970년대 들어 대남우위를 자신할 수 없게 되자 김일성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도적 연방제'를 주장했다. 1980년대에는 과도적 연방제를 골자로 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60~1980년대 간첩 남파 등을 핵심 수단으

로 하는 '남조선 혁명론'을 대남전략으로 추진했다. 김일성은 사망하기 직전 남북관계 특수론을 바탕으로 '느슨한 연방제'를 주장했으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느슨한 연방제'보다 더욱 수세적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다. 김정은도 2023년 말 대남·통일전략을 급격하게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김정일의 대남·통일전략이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유지했다. 이제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의 관점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만큼 단순 전술적인 관계 변화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전략적 변화로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 이후 실제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거나 경색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통일노선과 반대되는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통일을 논의할 수 없다며, 대남 대화 및 협력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국민족통일협의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등을 폐지했다고 밝혔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했다. 대내적으로 한국과의 연결고리 및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급기야 2024년 5~6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남북을 오가며 상대방의 원색적인 비난과 상호 적대감을 드러내며 충돌하기도 했다. 6월에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지뢰를 재매설하거나 벽을 쌓아 올리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3)]

북한은 남한과의 국력 격차 증대, 경제난 지속, 국제적 고립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남북 간 대립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이질성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실현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

3) "北 휴전선 설치중인 구조물, 대전차 장애물 비슷한 방벽," 『조선일보』, 2024.6.17.

다.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남북 간 서로의 이질성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 남북 모두 과거에는 고향이 남과 북에 혼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서로 고향을 둔 실향민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계속 통일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 이하로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4], 북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한국 등 외부 문물의 유입을 막는 모습을 볼 때 상호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단절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스스로 열세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더 이상 자신들의 방식과 위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두 개의 한국'을 부정하는 원칙 아래 남한을 고립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 전원회의를 통해 국가관계로 성격을 전환하려는 의도는 더 이상 한국과의 체제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패배적인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이 나타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특수관계의 성격에서 추구하려던 정책들을 폐기할 정도로 체제경쟁이 무의미해진 것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열세에 놓인 쪽은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흡수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체제유지를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자신감 표출은 오히려 체제의 열세에 놓여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며,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도 그대로 표출되었다. 당 전원회의에서도 '흡수통일'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며 적대감을 나타낸 것이 역

4)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조용신·조현주·김민지, 『2023 통일의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p. 31; 이상신·민태은·박주화·이무철·윤광일·구본상,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요약보고서』, 통일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2024.6.27.), p. 16.

설적으로 스스로 흡수통일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5] 북한 입장에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체제위기를 맞아 어떻게든 자신의 체제를 흡수통일로부터 지켜내려는 전략적 발로였다면, 미중 전략패권 경쟁이 격화되어 소위 신냉전적 상황이 도래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의 표현으로 파악된다. 결국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방향전환은 북한이 스스로 열세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원인과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한순간에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5천 년 이상 지속된 한민족이 공유한 역사와 문화를 배척하는 것은 반역사적인 행태로 비난하고 반박해야 한다. 한반도를 살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누구 한사람의 입장이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에 대한 이유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민족주의 개념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용어의 엄밀성을 위해 기존 학계나 정부에서 사용한 민족 부정론이 아닌 한민족 부정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민족 부정이라는 의미는 민족이라는 전체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곡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한 것은 민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중심의 남북관계에 한정되어 남한을 부정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개념의 재검토를 통해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보편 가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다.

---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문," 『로동신문』, 2023. 12.31.

Ⅱ.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주장 배경과 논리

1. 배경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및 대남정책과 관련해 느닷없이 이른바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후 동일한 맥락의 주장을 김정은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반복하는 배경으로는 크게 3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을 자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북한 주도로는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비롯한 이른바 '평화적 방법'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하며, 핵을 앞세우는 무력통일만 가능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본격화된 남북관계의 이른바 '개선·발전'이 궁극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 자각

김정은은 2023년 12월 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남북관계 역사와 관련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왔다며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라며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6]

김정은은 또한 2024년 1월 중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흘러온 력사의 장구한 기간 언제나 동족, 동포라는 관점에서 대범한 포용력과 꾸준한 인내력,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대한민국 것들과 조국통일의 대의를 허심탄회하게 론하기도 하였”다면서도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 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가 현실이라며 “외세의 특등 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7]

김정은의 이와 같은 언급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자신들이 이기거나 우위에 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남한 정부가 정권의 성격 또는 성향에 따라 상이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기저에는 북한 체제에 반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이라는 기조가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뿐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한의 역대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 및 남한의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변하는 부분에서는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12.31.
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1.16.

김정은이 일종의 위기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즉, 남한 정부에 의해 김정은 및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여기에서 나아가 남한 정부가 주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김정은이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이 남한의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 위기를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남북한 체제 경쟁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김정은은 군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 남한에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있으며,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이러한 인식의 일단을 공개 석상에서 일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남북한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6조 2,142억원으로, 남한의 2,161조 7,739조 원의 1.7%에 불과하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2년 말 기준으로 143만원인데, 이는 남한(4,248만원)의 3.4% 수준이다. 북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4만 7,000대, 항공기 보유 대수는 24대에 불과하지만, 남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50만 3,000대, 항공기 보유 대수는 732대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이다.[8]

다음으로 문화 분야에서는 남북한의 차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남한에서 기획·생산된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각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이른바 '한류'를 이루는 상황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980~1990년대 홍콩 영화, 일본의 대중음악 등이 아시아 일부 국가 등에서 유행하며 'J-pop'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적은 있지만 세계에서 일종의 흐름을 만들어내

8)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검색일: 2024.5.27).

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남한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이른바 'K-Drama', 'K-Movie', 'K-pop' 등으로 유행을 넘어 일종의 문화현상, 특히 '한류'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문화적 흐름(wave)을 만들어내고 있다.[9] 북한 당국이 이러한 한류의 영향력 유입, 특히 남한 문화가 북한 청년들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세 가지 악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하는 상황이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기 어렵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은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 중 하나이다. 반면, 북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가 남한에서는 민주화 이후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신생 독립국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해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거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비교적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언론자유지수 등과 관련한 남한의 순위가 다소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북한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매년 세계 최하위권의 '완전 부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남한은 2020년부터 여타 선진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당히 청렴'한 국가로 지속 평가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도 남한의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상황이다. 해외에 개설 중인 공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남한은 세계 191개국과 북한은 156개국과 각각 수교하고 있지만, 남한은 상주 대사관 116개, 총영사관 46개, 대표부 5개 등 총 167개의 재외공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반면, 북한은 상주 대사관 47개, 총영사관 3개,

9)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2023 지구촌 한류현황』(2023), pp. 16~19.

대표부 3개 등 총 53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다.[10] 남한은 27개의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 기구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지만, 북한이 가입한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 기구는 16개에 불과하고, 남한이 97개에 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해 활동하는 반면 북한은 15개에 그친다.[11] 영국의 '헨리 앤드 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내년 특정국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수를 집계해 발표하는 이른바 '여권 지수(Passport Index)'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남한은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과 함께 193개국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2위권이었던 반면, 북한은 42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만 가능해 방글라데시와 함께 98위권으로 나타났다.[12]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경제·문화·정치·사회·외교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의 역량은 남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에 남북한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북한이 역전하며 우위를 보이는 상황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놓는 발언들 속에서는 이처럼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 사실상 끝났으며, 북한의 절대적 열세를 당분간 자력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남북한의 역량이 비슷하거나 북한의 전반적 역량이 우위에 있다면 남한 정부가 실제로 북한 정권 붕괴 및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을 추구하더라도 부족한 역량 등을 고려해 이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급은 남북한 간의 격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10) 외교부, 『2022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외교백서)』 (2023), p. 274, p. 277.
11) 외교부, 『2022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외교백서)』 (2023), pp. 280~284.
12) 영국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 〈https://www.henleyglobal.com/passport-index/ranking〉 (검색일: 2024.5.27).

김정은이 의도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그동안 김정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현실 인식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이 언제부터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은이 내놓은 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러한 현실 인식이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정은은 2023년 말부터 갑자기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을 주장하며, 역대 남한 정부가 북한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지향해왔다고 강변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러한 언급은, 김정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과 합리적 전망에 기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나. 북한 주도로는 무력통일만 가능하다는 인식

김정은은 2023년 12월 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방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여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 력대 괴뢰정권들의 정책연장선에서 볼 때 결코 갑작변이와 같은 우연적 현상이 아니며 북남관계사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김정은은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한다며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주장했다.[13]

특히, 김정은은 2024년 1월 중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

10차 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개정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14]

또한 “이미 나는 우리 핵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 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 바가 있”다며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며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김정은이 2023년 말과 2024년 1월 중순

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12.31.
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1.16.
15) 위의 기사.

에 북한이 전쟁을 굳이 피할 의사가 없다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통일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문화·정치·사회·외교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의 역량이 남한에 절대적으로 열세를 나타내지만,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상당히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포함하는 북한의 우세한 군사력을 총동원해 남한을 괴멸시키고 한반도를 북한 중심으로 적화통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김정은의 인식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에서의 연설 등을 통해 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언행 등은 북한 주민 등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갖는다는 점에서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김정은이 외국, 특히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처럼 언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2019년 8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금이나 미래에나, 한국군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며 "우리는 특별한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제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16] 김정은이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자신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 이처럼 언급했다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이 평상시 갖고 있던 인식이 그대로 서한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등의 수단을 이용해 투발할 수 있는 핵폭발장치를

16)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8월 5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미클럽 '김정은-트럼프 친서 분석 및 전문'," 『SPN서울평양뉴스』, 2022.9.25.,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09〉 (검색일: 2024.7.10).

상당한 정도로 갖고 있으며, 남한을 향해 이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김정은이 앞서와 같이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김정은의 이러한 인식과 주장을 모두 허풍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핵 역량을 제외하더라도 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에 우세를 보인다는 평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7] 국제정치·북한·군사안보 관련 국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6~7월 진행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 3명만이 남북한 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과 관련해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했다.[18]

앞서 언급한 국내 전문가 1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남북한 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과 관련해 절반의 응답자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우위에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했다.[19] 또한 앞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이 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남한이 질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비대칭적 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29명이 "남한의 우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21명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17)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2014), p. 48.
18) 장철운·김상범·김차준·이기동,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285. 재래식 전력만을 기준으로 한미연합군과 북한군 중 어디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단 1명도 없었다. 장철운·김상범·김차준·이기동,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286.
19) 남한이 우위에 있다는 보기는 47명이 선택했다. 장철운·김상범·김차준·이기동,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285.

북한이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나섰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 질적 우위가 점차 작아져 북한의 압도적 우위가 재현될 것"이라고 각각 응답했다.[20] 핵을 제외한 세계 145개국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는 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남한은 세계 5위, 북한은 세계 36위로 평가되기도 한다.[21]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남북한 중 어디의 군사력이 더 강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북한 주도의 한반도 무력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핵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지만,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한미연합군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미국이 남한 등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위협처럼, 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한반도를 무력통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이 남한 등을 향해 핵을 선제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력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북한이 주도하는 무력통일 실현을 주장하며 대남정책 전환을 지시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인식과 주장이 사실이거나 실현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남북관계 개선·발전이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

20) 장철운·김상범·김차준·이기동,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312.
21) 글로벌 파이어 파워 웹사이트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검색일: 2024.5.27.).

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라며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강변했다.[22] 또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과 함께 《동족, 동질 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세워야" 한다며 "당면해서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련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23]

김정은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북한은 2024년 들어 기존에 노동당 중앙위 전문부서 중 하나로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관장했던 통일전선부를 '로동당 중앙위 대적지도국(10국)'으로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24] 2024년 1월 12일 개최한 이른바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도 정리한다고 밝혔다.[25] 또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6.15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역시 2024년 3월 12일

2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12.31.
2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1.16.
24) "김영호 "北의도만 믿으면 오판·안보문제 우려"…文회고록 비판(종합)," 『연합뉴스』, 2024.5.20.; "통일부 "옛 北통전부 '대적지도국'으로도 불려…심리전 강화"," 『연합뉴스』, 2024.5.24.
25)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대남정책전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군들의 궐기모임," 『조선중앙통신』, 2024.1.13.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임시위원장회의'에서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6] 이와 함께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북한은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 등에 관여했던 내각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각종 남북경협 사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고 결정했다.[27] 또한 북한은 2024년 2월 7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채택했다.[28]

북한이 노동당과 내각 등에 있던 기존의 대남기구를 일제히 변화·정리한 이유는 앞으로 남한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으로만 간주하고 상대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곧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그동안 양측이 상호 관계의 두 수레바퀴 중 하나로 간주했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배경으로는 기존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 및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강변을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정권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총체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남한 일부에서 주장

26) "북한 '대남기구' 정리에 6·15해외측위원회도 해산," 『연합뉴스』, 2024.3.14.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함에 대한 결정," 『조선중앙통신』, 2024.1.16.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4.2.8.

하는 것처럼, 그동안 이뤄졌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북한에 이익이 됐다면 김정은이 기존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이처럼 전면 부정하고,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차단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 적지 않게 다르다. 통일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89~2022년 남북한 간 교역액은 총 248억 6,100만 달러인데, 이 가운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이른바 '남북한 간 3대 경협 사업'이 본격화된 2006~2022년 남북한 간 교역액은 188억 1,500만 달러(75.7%)이다.[29] 관련해 개성공단이 운영될 당시 북한 근로자가 가장 많이 근무했던 2015년의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으로만 1천만 달러 이상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30] 뿐만 아니라 1995~2022년 남한에서 정부와 민간 등이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총 3조 3,431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갚지 않고 있지만 갚아야 하는 식량차관(8,72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조 4,703억원은 남한 정부와 민간 등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다.[31]

이러한 현황은 김정은이 향후 남북한 간 교류·협력 단절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며 결코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이유를 경제적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특히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2018년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북한 내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김정은이 판단했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2018년에만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개최했는데,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5.1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29) 통일부, 『2023 통일백서』 (2023), p. 264, p. 266.
30) 2015년의 경우, 북한 근로자 약 5만 5천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면서 개인별로 매월 평균 188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통일부, 『2023 통일백서』 (2023), p. 77.
31) 통일부, 『2023 통일백서』 (2023), p. 269.

연설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 또한 북한은 2018년 4월 1일과 동월 3일 이른바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진행하게 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재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018년에만 남북한을 왕래한 인원이 7,498명(방북 6,689명, 방남 809명)에 달했다.[32]

그런데 이처럼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물꼬를 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북한 내부, 특히 북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북한 주민들에게 미쳤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이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내에 은밀하게 유입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며 상당하게 유행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33]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당국이 나서서 2018년에 한국 문화 등을 북한 내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던 것이다. 따라서, 확인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당국이 2018년부터는 그 이전까지처럼 북한 내에서 유행하는 한국 문화를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북한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대체로 유행에 민감한 청년층을 비롯해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한국 문화 접촉 금지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이른바 '북한판 국가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표현이 공식·공개 자료에 처음 등장한 시점은 2017년 11월 20일로, 이날 노동신문의 정론에는 '우리 민족제일주

32) 통일부, 『2019 통일백서』 (2019), p. 342.
33) 조현성, "북한 내 한류 현상 연구의 현재와 미래," 『현상과 인식』, 47권 3호 (2023), pp. 51~76 등 참고.

의'에 바로 이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했다.[34]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017년 12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12.10)',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12.16)',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12.27)'라는 제목의 기사를 잇달아 게시했는데, 첫 기사 게시 이후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우월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려는 각오와 의지"라는 정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35]

평창 동계 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전환이 모색되던 시기에 '우리 민족끼리'를 다시 내세우며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지 않았던 북한은 정세 전환 시도가 사실상 좌절된 2018년 11월 9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다시 소환했다.[36] 그리고 이로부터 꼭 1주일 뒤인 2018년 11월 16일 북한은 김정은이 첨단 전술무기, 즉 남한 타격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37] 김정은은 2019년 1월 1일 이른바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공식화하는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 이른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민족'과 국가를 일체화한 북한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별개의 민족과 국가 간 관계로

34) 해당 구절은 "하늘을 나는 우리의 경비행기며 강원 땅에 높이 솟은 발전소 언제, 우리 인민들 누구나 즐겨찾는 ≪철쭉≫ 상표 양말과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소나무≫ 책가방으로부터 려명거리 종합상업구 대매에 쌓인 ≪대봉산≫ 구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주렁지는 창조와 행복의 모든 열매들은 다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눈부신 실천으로 구현해오신 그이의 위대한 손길에서 마련된 것들이다"이다.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나가자," 『로동신문』, 2017.11.20.

35)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p. 27.

36)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2018.11.9.;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p. 32.

3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11.16.

규정한 것은 나름 논리적일 수 있다.[38] 이에 따라 그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던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김정은이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라.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가 심회되었다는 인식

김정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에서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39] 북한은 미중 간 전략패권경쟁의 심화와 동시에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등 국제정치적 요소들이 작용하며 국제사회의 신냉전이 본격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이 2022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국제질서의 신냉전 흐름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신냉전 논리는 미국 패권의 약화로 인한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연계되어 진행된다고 보았다. 북한은 2008년 논평에서 "다극화추세의 도도한 전진에 부딪쳐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였다"고 진단했다.[40] 해당 논평에서 "로씨아를 비롯한 대국들"에 의해 "미국의 일극화야망에 대한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다극화세력과 힘의 불균형을 유지하려는 일극화세력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중국, 러시아 등 도전세력들에 의해 흔들리면서 다극 체제

38)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이무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pp. 58~84.
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1.1.
40) "《새로운 랭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 『조선중앙통신』, 2008.6.7.

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노동신문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대국들사이의 모순과 대결이 격화되면서 세계가 혼란에 빠져들고있으며 그 결과물은 새로운 랭전이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41]

북한이 국제사회가 신냉전적 대립구도가 심화되었다고 파악하는 이유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뿐만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 형성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 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 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해 "《동맹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42] 2024년 4월에는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서는 "미국이 랭전식사고방식에 포로되여 배타적인 군사쁠럭을 형성하고 진영대결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43]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연합의 강화 움직임이 북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되는 것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비롯하여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냉전적인 정책으로 규정하며 비난했다.[44]

한국에 대해서는 냉전적 인식을 바탕으로 군비증강과 미국의 전략무기를 전개한다고 비난하며, 한국이 적대적인 대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의 대결적 자세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력

41) "격화되는 대국들의 모순과 대결, 부활하는 랭전," 『로동신문』, 2019.9.9.
4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1.1.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4.4.24.
44)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4.4.24.

을 통한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의 수호를 강조하는 군사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를 신냉전으로 규정하여 소위 진영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으로 핵보유 정당성을 주창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여 북한 자신들의 핵보유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차원이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으로 귀결되었다.

2. 논리 분석

여기에서는 상기와 같은 배경 하에서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을 급작스럽게 제기하며 내세운 나름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김정은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두 국가론'을 제기하며 내세운 논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이 내세운 '두 국가론'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김정은이 '두 국가론'과 일정하게 다른 맥락에서 내세운 것처럼 보이는 '한민족 부정론'과 관련한 논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이 급작스럽게 제기한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이 논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지 정합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가. 두 국가론

먼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론'이 어떠한 논리를 갖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의 남북관계와 관련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역사라며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 력대 괴뢰

정권들의 정책 연장선에서 볼 때 결코 갑작변이와 같은 우연적 현상이 아니며 북남관계사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변했다. 김정은은 "비정상적인 사태"와 관련해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 것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광증과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하여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이 항시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방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여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이른바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45]

특히, 김정은은 한국의 역대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이라는 기조 하에서 추진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북한 정권 붕괴 및 흡수통일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주창해왔던 이른바 '조국통일 사상과 노선, 방침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고 한국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방제와 상반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이라는 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 전반이 양키 문화에 혼탁되였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며 "북남관계는 더 이상 …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주장했다.[46]

---

4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12.31.
46) 앞의 기사.

나아가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이 남한을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했다며 개정 헌법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다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정은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며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47]

김정은이 언급한 이와 같은 내용 중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표현으로는 '전쟁 중인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의 병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김정은이 남북한을 이른바 '두 국가'라고 언급한 대목은 그의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이 결코 언급한 적이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할 경우에는 북한의 전반적인 역사에 깊숙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통일의 당위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남북한을 이른바 '두 국가'로 규정하며 앞으로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이 남북한을 '두 국가'라고 규정한 대목은 지금까지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총리회담 등에서 남북관계에 관해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쌍방 사

4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1.16.

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48] 이후 이뤄진 다섯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당국이 인정하고 합의한 이와 같은 규정을 남북관계의 성격으로 전제하고 이뤄졌다. 이는 김정은이 2018년 스스로 서명하고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5년여 만에 자기가 약속했던 사항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은의 언급에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전쟁 중인 가장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 전개된 한반도의 역사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한은 80년 가까이 군사적으로 대립·대결·대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전격적인 불법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은 3년여 동안 이어지며 남북한 간의 적대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분단을 더욱 강하게 고착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6.25전쟁은 명확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쌍방 군사령관 간의 합의인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됐다. 「정전협정」 제60조에서 합의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한 한 급 높은 정치회의'가 1954년 4~7월 '제네바 정치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됐지만,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6.25전쟁이 일단락된 이후 남북한 간에 크고작은 무력충돌은 종종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6.25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발발한 적은 없다. 다시 말하면, 6.25전쟁이 '사실상(de facto)' 종료된 것처럼 인식되는 오늘날에도,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남북한이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48)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https://dialogue.unikorea.go.kr/〉 (검색일: 2024. 5.27.).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80년 가까이 군사적인 대립·대결·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약 10년 동안 남북한은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호 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49]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유럽 지역 내 국가들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유럽이 통합하는데 이론적 기반이 됐던 이른바 '(신)기능주의'를 한반도의 남북한 간에도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던 것이다.[50] 즉, 남북한 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양측 간 정치적 화해 및 군사적 긴장 완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와 같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고 일정하게 이행됐던 적이 있지만,[51] 이 역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호 간 적대성에 기반한 군사적 대립·대결·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요컨대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남북관계와 관련해 급작스럽게 제기한 이른바 '두 국가론'과 관련해 주요한 사안은 '전쟁 중인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의 병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국가론'이라는 논리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 중에서 남북한이 전쟁 중에 있다거나 가장 적대적이라는 등과 같이 상당한 정도는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국가론'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 두 국가'는 북한 역사와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 등 그 어디에

49) 조봉현,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간 신뢰 형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기획, 『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 (서울: 선인, 2013), pp. 65~83; 김석향, "남북 간 사회문화 분야의 신뢰 형성: 현황과 과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기획, 『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 (서울: 선인, 2013), pp. 85~101.

50) 이헌경,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신기능주의적 접근," 『통일문제연구』, 8권 1호 (1996), pp. 62~94 등.

51) 이남주·이정철, 『신한반도체제 추진 종합연구(2): 신한반도체제의 평화협력공동체 형성』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p. 124.

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논리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개별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두 국가론'의 현실적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는 이와 함께 남북한의 평화통일 당위성 및 필요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 차원에서의 현실을 두 국가론과 관련한 논리적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나. 한민족 부정론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한이 동일한 한(韓)민족이라는 의미인 '동족'을 "수사적 표현"이라고 치부하며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이라고 비하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지금 남조선이라는 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 전반이 양키 문화에 혼탁되였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하다고 비하하며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니라고 강변했다.[52]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북한이 오랜 기간 "언제나 동족, 동포라는 관점"에서 남한을 상대해 왔지만 북한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는 등의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남한에서는 "동족 의식이 거세"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남한을 "외세의 특등주구 집단"이라고 지칭하며 남한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 생활과 정신문화 생활령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5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12.31.

지시했다. 이어 헌법을 개정하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을 삭제하고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철거 등을 통해 북한의 "민족 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53]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은 남북한이 동일한 한민족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김정은의 이른바 '한민족 부정론'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와 현실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 즉 "특수한 종류의 문화적 조형물"이 민족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54] 민족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안은 바로 남북한이 공유하는 역사와 혈통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각각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에 대한 인식 차이 등 때문에 남북한 각각은 근·현대사뿐 아니라 근·현대 이전의 역사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른바 '단군'으로 시작되는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큰 틀에서 대체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남북한 대부분의 주민이 모두 한(韓)민족이라는 동일한 혈통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김정은이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하며 남한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을 넘어 북한이 과거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막말을 섞어가

5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1.16.
54)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2), pp. 23~24.

며 남한을 비하한 점은 비논리적일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결코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한의 역량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남한은 선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남한이 선진국 수준의 실상과 문화가 이미 널리 퍼져있으며, 불과 5년 전에는 김정은도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모든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에 앞서 있고 우수하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55] 따라서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느닷없이 이른바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하고,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더라도 남북한이 한민족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김정은이 제기한 한민족 부정론은 역사적·현실적·논리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김정은은 한민족 부정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 적대감·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남한에 대한 동경과 의존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정은이 역사적·현실적·논리적으로 정당성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민족 부정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존을 위한 북한 체제 결속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대한 기대와 대남 동경·의존이 상당할 정도로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북한 체제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55) 대표적으로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며 "평창올림픽 갔다 온 분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할 수 있다. "文대통령 "백두산 가보고 싶다"…金 "초청하면 언제든 청와대에"(종합)," 『연합뉴스』, 2018.4.27.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

만약 김정은이 선대가 추진했던 대남·통일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만의 대남·통일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일정하게 남북관계 냉각기를 갖기 위해 이른바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이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루는 두 축 중에서 군사적 대립·대결·대치에만 집중할 수는 없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구상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대남·통일정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새로운 남북관계의 미래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은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기저에는 남북한 주민이 동일한 한(韓)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공감대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

Ⅲ. 민족주의 개념의 재검토와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

1. 민족주의 개념과 연구의 비판적 기원과 변화

가.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인식의 필요

현행 헌법 제4조에 따르면 평화 통일 정책의 규범적 기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통일정책의 일관된 원칙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이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원칙을 단순히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본질적 보편주의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의 '전체주의 국가'와의 대립 관계,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시민과의 연대 중요성을 모두 강조한 바 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반전체주의적 성격과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의 보편주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재확인하는 표현이다.[56]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를 이념적으로 보다 분명히 하고 관련 쟁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유주의의 보편주의 원칙에 대한 재확인은 1987년 이래로 헌법적 규범이 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 수립"이라는 원칙에 내재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최근 북한의 한민족 부정론 제기는 기존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대응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원칙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이 원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재검토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56) 대통령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2022.8.15., 『대통령의 말과 글』〈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GQ0XfcPy〉 (검색일: 2024.7.1.).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동시에 그 대상인 전체주의 국가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동시에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민족의 통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민족 동질성 강화와 회복에 규범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목표와 당위는 북한의 한민족 부정론에 의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정책목표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측면이 크다. 다만 이러한 계기로 재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보편주의 원칙과 특수주의 정책의 관계정립 문제다.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 내지는 가치 입각한 통일한 보편주의적 지향을 의미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만 특수한 동질성을 강화 및 옹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족주의적이고 특수주의적 정책목표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두 가지 목표는 한국의 통일정책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견의 여지가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당위에 대한 강조 때문에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이질적 관계, 그리고 양자 사이의 간극을 간과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사이에는 구체적인 접점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접점을 창출하는 것이 정책수립과 실행의 기술인 것은 틀림없지만, 단순히 양자의 당위에 대한 선언적 강조가 그러한 노력을 대신해주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 자유주의의 보편 원칙과 민족주의의 특수성 사이의 간극은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이미 내재된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흔히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민주주의는 주로 주권재민(popular sovereignty)의 원리와 동일시된다. 그런데 민(民)이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의 경계가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즉 누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포함되고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민주주의의 근원적 문제라면, 이는 대내적 동질성과 대외적 배타성의 원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때 주권재민으로서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내적 동질성과 대외적 배타성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동질성과 배타성은 주로 정치적이고 법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민족주의는 문화적이거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가 존재한다.[57]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자유주의의 보편주의와 동일시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구체적이고 한정된 정치적 혹은 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주의와 민족 공동체의 특수주의 사이의 간극,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의 이질성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족주의 연구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단지 보편과 특수의 차원에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 그리고 민족적 특수성과 다른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와의 관계에서 개인은 합리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동의와 선택의 주체인 반면에 후자와의 관계에서 개인은 출생과 함께 귀속되는 일원이자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체로 설명된다.

보편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한 이론적으로 개

57) 주권재민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갖는 대내적 동질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근거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가능성을 거부한 대표적인 정치철학자는 바로 슈미트(Carl Schmitt)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패전과 이후 베르사유 체제에서의 독일의 불리한 위치가 서구의 자유주의자와 그들의 독일 내의 동조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고, 그들에 맞서 종전 이전까지는 독일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민주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사상적 무기로 재정의하여 동원하였다. 그는 다만 민주주의에 특유한 동질성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반면에 민족주의적 동질성은 정치적이지 않고 문화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즉 민족주의적 동질성은 명확하게 주권의 소재(군주 혹은 국민)를 규정하기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분명한 구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카를 슈미트, 나종석 옮김,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1923/1926] (서울: 길, 2012);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1928] (Berlin: Duncker & Humblot, 2017).

인은 자유민주주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가 여부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개인이 특정 민족이나 국민의 일원인가, 혹은 특정 종교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부는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이 오직 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현실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완전히 '열린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실제 정치공동체 수준에서 완전히 보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특히 사회계약이론에서와 같이 개인의 강제나 위협 없이 자발적으로 오직 자신의 판단에만 따라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동의의 권리에 의해서 사회가 성립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그 순수한 논리적 귀결은 세계시민주의적 보편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민족 동질성은 보편적인 것도 아니며, 개인의 자발적 동의나 선택의 대상도 아니며, 그러한 동의나 선택에 의한 결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즉 민족 동질성이나 민족성(nationhood)이란 개인들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민족 동질성은 법치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나 원칙과도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민족 동질성이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특수한 맥락과 배경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보편적 원칙이나 가치가 아닌 집단적 기억과 서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의 공유로 설명된다. 개인은 이러한 개별 민족의 문화나 동질성에 귀속되며 그 정체성 집단에 소속된다.

결국 최소한 그 내적 논리 혹은 원칙에만 따른다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은 서로 상이한 정책목표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의 정책목표, 즉 자유민주주의를 평화 통일 정책 수립의 규범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당위와 남북의 민족 동질성의 강화라는 당위 사이에 양자택일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최소한 이념형으로 고려했을 때, 두 가지의 정책목표가

결코 그 자체로는 혹은 본질적으로 서로 수렴한다거나 연속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소한 이질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한 이질성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두 가지 정책목표를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보다 신중함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나 인권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조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북한 사회의 변화와 상황 개선이 반드시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반대로 민족 동질성에 대한 강조가 곧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가치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반드시 전제로 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피하면서 양자가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전체주의의 원형으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적 비판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이와 같은 간극 혹은 이질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가장 극적으로 강조된 계기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서의 파시즘, 그리고 특히 전체주의의 부상이었다. 전체주의 비판의 이론을 구축하고 그 발전을 이끈 주요 사상가들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전체주의의 원형이자 토양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와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만일 민족주의와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면, 민족주의를 최대한 상대화 및 약화하는 것, 즉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규범의 통제 하에 놓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들 반전체주의(anti-totalitarianism) 사상가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자유주의 혹은 민주주의 원칙을 세계시민주의적 보편주의와 연관시키면서, 그 반대편에 폐쇄적이고 반다원적이며 불관용의 사회, 그리고 편협한 인

종적 정체성과 절대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하는 독재 체제로서 전체주의를 규정하였다. 이때 민족주의는 인종적이고 종족적 편협함과 배타성, 폐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부족적 민족주의(tribal nationalism)' 혹은 '부족주의(tribalism)'로 주로 불린다.

특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처한 이중적 과제, 즉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 통일 지향이라는 이중의 과제와 관련하여 반전체주의 사상가들의 사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들이 대체로 중부 유럽(Central Europe) 출신의 유태인 망명 학자들이라는 점에 있다. 20세기 초중반의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 중부 유럽이라는 배경은 비교적 멀지 않은 과거에 통일을 한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전과 함께 해체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경험과 기억의 공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반유태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의 박해를 피해 영국 혹은 미국 등으로 망명한 유태인 학자 및 저술가라는 개인사적 맥락을 고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은 이들의 지적 성과와 분리될 수 없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동화(assimilation)되었던 세계시민주의적 제국의 시민, 제국 붕괴 이후의 국민국가의 일원, 그리고 유태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이라는 최소한 세 가지의 상이한 소속감 사이의 갈등과 타협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지적 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다.[58]

58) Malachi Haim Hacohen, "Dilemmas of Cosmopolitanism: Karl Popper, Jewish Identity, and "Central European Culture","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71, No. 1 (March 1999), pp. 105~149; "Berlin and Popper between Nation and Empire: Diaspora, Cosmopolitanism and Jewish Life," Jewish Historical Studies, Vol. 44 (2012), pp. 51~74.

<표 Ⅲ-1> 20세기 반전체주의론과 한국 자유민주주의 통일담론에 있어서의 정체성의 세 가지 차원 비교

구분	반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가들의 경우	한국 자유민주주의 통일담론의 경우
세계시민주의적 정체성	제국적 다민족 정체성, 영국 혹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국민국가적 정체성	전체주의 탄압의 원천으로서의 부족적 민족주의와 망명지 국민국가(영국, 미국)의 국가/민족 정체성	분단 상황에서 현상 혹은 현실로서의 대한민국과 북한 각각의 차별적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디아스포라 정체성 혹은 건국 이후 이스라엘 국가 정체성	통일이 지향하는 통합적 민족 정체성 혹은 동질성

출처: 저자 정리

그들은 전체주의와 인종적 민족주의의 탄압과 박해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우선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전제로, 자신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세계시민주의 혹은 보편주의적 차원에 의탁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동시에, 최소한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는 디아스포라(diaspora)로서의 유태인의 민족정체성과 자의든 타의든 관련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태 민족주의와 한국 민족주의, 유태 민족의 역사와 한민족 역사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체주의에 맞선 보편주의적인 세계시민주의 이외에도 제도화된 현실로서의 국가정체성, 그리고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종의 지향으로서의 민족정체성라는 세 가지 차원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를 보이기 위해 특히 포퍼(Karl Popper)의 민족주의 비판 논의를 검토한다.

포퍼의 민족주의 비판론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주로 과학철학 영역에서의 업적과 공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유일한 정치사상 저작인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1945)은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전체주의 비판서 중 하나인데,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의미하는 열린사회에서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와 권리, 즉 형식적 합리성에 의존하여 점진적으로 사회개혁과 진보가 실현되는 반면에, 전체주의를 의미하는 닫힌사회에서는 부족주의적 폐쇄성과 배타성을 기반으로 하여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지상과제 실현을 위해 형식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이 정당화된다는 점을 대비시킨다.[59] 그런데 이러한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비 혹은 대립의 구도 기저에는 해체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다민족 체제 하에서 동화된 유태인으로서의 기억과 정체성이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그가 생각한 자유민주주의 즉 세계시민주의의 체제란 최소한 세 가지 제국의 사례가 중첩된 모델이다. 첫째, 과거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같은 다민족 제국, 둘째, 자신이 망명지로 택한 영국의 해상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세기 영국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저술가들이 자유주의 제국의 모범으로 찬양했고 그 자신도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해상 상업제국이다.[60] 게다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대

59) Karl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1. The Spell of Plato,*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1945); Karl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2. The High Tide of Prophecy: Hegel, Marx, and the Aftermath,*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1945).

60) 포퍼는 고대 아테네의 침략행위나 노예제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부족주의적 민족주의의 배타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제국주의"가 필요하며, "아테네인들에 의해 도입된 제국주의적 조치 일부는 자유주의적이었다"고 지적한다(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1., p. 158). 이러한 자유민주적·세계시민적 제국주의에 대한 옹호를 파시즘 등장 이전까지의 중부 유럽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다민족·다문화적 유산과 연결시킨 해석으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Hacohen, "Dilemmas of Cosmopolitanism," pp. 105~149. 이 논문의 저자는 포퍼의 '열린사회'의 또 다른 모델이

한 대안으로서의 세계시민주의적 차원을 이러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배경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다민족적이고 다문화적 제국 체제에 동화된 유태인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유태인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으로 보는, 유럽의 반유태주의(antisemitism)에 대한 대안이 유태인의 전통적 정체성에 대한 고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제한적이고 (포퍼 자신의 관점에서는 반유태주의의 원천이 되는 중부유럽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부족주의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다민족적이고 세계시민주의적인 제국으로의 동화를 해결책으로 간주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에게 원형적 전체주의로서의 "민족주의의 해독제는 제국주의였고, 반유태주의에 대한 그의 해독제는 동화"였다는 것이다.[61]

결국,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가장 긴박한 전쟁 상황이었던 1940년대 초중반에 제기된 대표적인 세계시민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방식의 자유민주주의 옹호론의 배경에는 부족주의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인 제국주의에 대한 선호, 그리고 동시에 유태인 정체성에 대한 마찬가지로 부족주의적인 고수에 대한 확고한 비판과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주의적 유태인 정체성에 대한 거부는 시오니즘(Zionism)과 이스라엘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62] 세계시민주

바로 빈(Wien)을 중심으로 한 학자 네트워크, 즉 지식인 공동체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61) *Ibid.,* p. 110. 이런 점에서 포퍼는 닫힌사회 혹은 부족주의를 "부족의 최고의 중요성" 없이는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생각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러한 관념의 중심에 '선민사상(the doctrine of the chosen people)'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사상의 근원에는 탄압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데, 그러한 선민사상의 원형은 고대 유대교에 있다고 설명한다(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1,* p. 7, 179 n3).

62) *Ibid.,* p. 145. 이 점에서 이 논문의 저자는 포퍼가 세계시민주의와 민족주의

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곧 민족주의에 대한 자동적 부정을 의미할 수는 없지만, 포퍼의 사례로부터 최소한 양자 사이의 간극을 부정할 수 없다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 이분법의 등장과 그 맥락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와 다민족 및 다문화적 제국의 유산 아래 있었던 동화유태인 관점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세계시민주의적 대안에 대한 옹호는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주의 사이의 수렴을 포퍼 보다는 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본, 민족주의 연구의 중요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콘(Hans Kohn)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63] 그는 이후 민족주의 연구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이분법인 소위 시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와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구별을 처음 제안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자신은 사실 이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자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혹은 서구적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 혹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부족주의적 민족주의와 같은 의미의 용어로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당연하게도 콘 자신의 고유한 성과는 아니다. 그 기원은 독일의 대표적인 역사주의자이자 역사학자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의 1907년작 『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마이네케는 국가민족(Staatsnation)과 문화민족(Kulturnation)을 구별하고 있다.[64] 전자는 민족의 등장 혹은 성립 이전에 이미 성립된

사이의 타협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잘못 설명하였다고 비판한다.

63)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 and Background,* (New York: Macmillan Publishers, 1944);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Princeton: D. Van Nodstrand Company, 1955).

64) Friedricch Meinecke, *Weltbürgertum und Nationalstaat* [1907],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69).

국가를 전제로 한 민족이라면, 후자는 반대로 국가 성립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이 등장 혹은 성립된 경우를 지칭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경계와 제도적 특성을 기준으로 민족이 성립된다면, 후자는 순수하게 공유된 문화만을 기준으로 민족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구별의 특징은 예컨대 아렌트의 서구 민족주의와 부족적 민족주의의 구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에 따르면 전자와 후자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자의 구성원의 '뿌리없음(rootlessness)'이다.[65] 다시 말해서 전자는 확립된 국가 제도를 전제로 시민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민족 구성원의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후자는 그러한 법적 지위와 같은 명확한 기준 없이 민족운동 등의 차원에서 민족구성원의 소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후자에 비해 전자가 우월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민족인데,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위에 따라 민족구성원 혹은 시민의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대 민족국가의 사명인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제국주의와 전체주의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국민국가의 이상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는 것이 아렌트의 결론이기는 하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의 유태계 미국 역사학자인 콘의 유명한 구별에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콘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서구의 민족주의와 비서구의 민족주의로 구별된다. 두 가지 유형의 민족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65) Hannah Arendt,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Cleveland: Meridian Book, 1958), p. 232.

서구 세계에서, 즉 잉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미합중국, 그리고 영연방 자치령에서 민족주의의 부상은 현저하게 정치적 사건이었고, 미래의 국민국가의 형성은 민족주의의 부상에 선행하였거나 미합중국의 경우처럼 일치하였다. 서구 세계 밖에서, 즉 중부와 동부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민족주의는 이후에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와 정치적 발전의 보다 후진적 단계에서 등장하였다. 기존 국가의 국경과 부상하는 민족성(nationality)은 거의 일치하지 않았고 민족주의 그러한 곳에서는 기존의 국가에 맞선 저항 운동 속에서, 그리고 갈등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고 그 주된 목표는 기존 국가를 민족의 국가로 변형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족/민족적(ethnographic) 요구에 맞춰서 정치적 경계선을 재설정하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였다.[66]

두 가지의 민족주의가 이렇게 상이한 상황과 요구에서 등장하게 된 결과 그 원칙에 있어서도 양자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서구 민족주의의 핵심원칙이 "개인의 자유와 합리적 세계시민주의"였다면 비서구 민족주의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서구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서구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된 비서구 민족주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기 확신이 결여"된 결과 일종의 '열등감 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를 갖게 되었다. 이는 자신들의 민족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잘못되고 과장된 강조와 확신으로 이어지고 독일, 러시아, 혹은 인도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자기들 고유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민족주의에 비해 무한히 깊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따라서 문제와 잠재성에서 풍부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67]

---

66)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p. 329.
67) *Ibid.,* p. 330.

결국 서구 민족주의는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법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보여주었다면, 비서구 민족주의는 개인주의적 시민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변혁과 법적 제도의 수립 대신에 서구 민족주의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지식인과 엘리트에 의해 고유의 민족 문화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험한 강조와 확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양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서구 민족주의가 개인의 자발성과 선택에 의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반면에 비서구 민족주의는 우연에 의한 결정을 운명 혹은 문화로 받아들이고 이를 강제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68] 그리고 이후의 민족주의 연구자들은 서구적 민족주의를 시민적 민족주의로, 비서구적 민족주의를 종족적 민족주의로 부르게 되었다.

한스 콘이 이와 같이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이분법적 구별을 구상하고 이를 체계화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대의 논쟁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대에 콘 자신에게 중요한 맥락으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유태인 민족주의인 시오니즘 내부의 논쟁이다. 1934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이미 콘은 시오니즘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실제로 1925년부터 미국 이민 이전까지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거주하였으며, 민족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저술을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기의 시오니즘 내부에는 팔레스타인들을 배제하고 유태인들만의 국가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팔레스타인들과 공존하는 두 국가를 추구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전자를 종족적 시오니즘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문화적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콘은 바로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였다.[69]

그리고 서구적 민족주의와 비서구적 민족주의, 혹은 시민적 민족주

68) *Ibid.*, pp. 329~330.
69) Ken Wolf, "Hans Kohn's Liberal Nationalism: The Historian as Prophe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7, No. 4 (October-December 1976), pp. 651~672.

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은 바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배제하려는 편협하고 분리주의적인 종족적 시오니즘을 비판하고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 시오니즘을 정당화하고자 한 콘 자신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발전되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서구적 민족주의 내지는 시민적 민족주의의 이론적 원형은 콘에게는 문화적 시오니즘이며, 반대로 비서구적이고 종족적 민족주의의 원형은 종족적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연히 그의 이분법에서는 강한 서구 중심주의가 감지되지만,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는 문화적 시오니즘을 서구의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의 계보의 연장선상에서 정당화하고자 한 그의 정치적, 학문적 의도와 논쟁적 배경에 비추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콘의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 이분법은 배타적인 순수 유태인 국가를 추구한 종족적 시오니즘이 단지 주어지고 계승한 종족적 정체성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결과라고 비판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포용적이고 평화주의적인 문화적 시오니즘을 서양 자유주의의 계약론적 전통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산물이라고 정당화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이분법적 인식이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계기로 세계사적 차원으로 투사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민족주의 비판 담론의 형성 및 등장과 관련하여 아렌트의 전체주의 비판론 또한 유사한 논쟁의 맥락을 보여준다. 아렌트 또한 배타적인 순수 유태인 국가 건국에 매우 비판적이고 팔레스타인인과의 공존을 위한 두 국가 해결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렌트는 이러한 시오니즘 내부의 논쟁에 착안하여 국민국가에 잠재된 독재로의 경향이 배타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주권 유형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다원주의적이고 비주권적인 공화주의적 연방제 모델을 대립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종전 이후 유럽의 정치질서가 전체주의의 잠재적 원천으로서의

절대적이고 폭력적 주권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민국가간의 체제가 아니라, 이러한 주권을 해체한 연방주의적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0] 그리고 이후에 아렌트는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 주권의 원리를 우선시하는 국민국가 탄생의 진원지로서 프랑스 혁명을 지목하고 반대로 주권과는 완전히 상반된 다원주의와 입헌주의 원리로 구성된 미합중국을 탄생시킨 미국 혁명의 모델을 대비시키는 연구를 발표하기에 이른다.[71]

이렇게 봤을 때, 서구적 민족주의 혹은 시민적 민족주의와 비서구적 민족주의 혹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의 탄생 배경에는 단지 우월한 서구 자유주의와 그렇지 못한 비서구의 비자유주의, 혹은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와 그렇지 못한 유럽 대륙의 비자유주의라는 두 가지 추상적 원칙 혹은 단순화된 모델을 대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의 배타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 혹은 연합과 같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국가를 포기하고 연방제 내지는 연합제적인 공화주의 원칙을 택해야 한다는 대안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도 없고, 맥락에 따라서는 이러한 선택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체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차별화해야 한다고 믿었던, 선구적 사상가와 학자들에게 있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구별하는 문제는 그 해결을 결코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

70) William Selinger, "The Politics of Arendtian Historiography: European Federation and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Modern Intellectual History,* Vol. 13, No. 2 (August 2016), pp. 417~446.

71) Han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Penguin, 1963).

2. 민족주의 개념의 다의성

가. 시민적-종족적 이분법에 대한 비판

콘이 처음 제시한 이래로 민족주의 연구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은 특히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크게 봐서 이러한 비판은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 자체에 대한 역사학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역사학 연구의 발전과 축적에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가 최소한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는 결코 단순한 이분법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19세기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처음 등장하면서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대한 전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은 주로 자유주의 역사서술에 있어서의 최근의 수정주의적 흐름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독일 역사학자 레온하르트(Jörn Leonhard)의 말을 빌리면, 19세기 동안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개념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이고 뒤얽힌 관계(entangled relationship)" 속에서 형성되어 변화해 나갔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본질적으로 이분법적인 관계 혹은 '양립불가능'의 관계에 있다는 시각은 1920년대 이후 파시즘 및 공산주의와의 적대관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기존의 서유럽 혹은 서구적 자유주의와 비서구적 민족주의의 대립 구도 또한 19세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것이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지에서 자유주의자들도 대체로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로 인식했고, 동시에 이 시기의 민족주의자들은 스

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인식했다는 것이다.[72]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는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확인된다. 수정주의 연구들에 의해 자유주의 정치이념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지목되는 것은 나폴레옹 전쟁인데, 이 전쟁은 프랑스 혁명의 소위 '자유주의 이념(idées libérales)'의 명분으로 수행되었고, 이 전쟁의 여파로 프랑스 군대에 점령을 당한 유럽 전역의 나라들에서 프랑스 혁명의 진보적 이념에 대한 동조 및 옹호와 프랑스 호전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이중의 산물로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동시에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73]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맥락은 19세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역동적이지만, 여전히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중요한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74]

둘째,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이 분석적 범주로서 그 유효성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순수한 이념형으로서의 시민적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이지 민족주의가 아닌 것이 되며,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주의 또한 결코 순수하게 종족적 이념형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민족주의에서 말하

---

72) Jörn Leonhard, "Liberalism and Nationalism: Trajectories of an Entangled Relationship," *The Cambridge History of Nationhood and Nationalism: Vol. II, Nationalism's Fields of Interaction*, edited by Cathie Carmichael, Matthew D'Auria & Aviel Roshwa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pp. 331~350. 인용은 p. 331.

73) *Ibid.*, pp. 332~334.

74) 서구 자유주의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그리스의 독립과 국가성립과정에서의 자유주의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재조명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관한 서유럽 중심의 관점을 재고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준다[Michalis Sotiropoulos, *Liberalism after the Revolution: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the Greek State, c. 1830-18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또한 마찬가지로 오스만 제국의 폭정으로부터의 그리스의 독립 전쟁에 대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지지는 영국 자유주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Leonhard, "Liberalism and Nationalism," p. 333; Fred Rosen, Bentham, Byron and Greece; Constitutionalism, Nationalism, and Early Liberal Political Thou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는 민족이란 순수하게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소속되는 민족인데, 시민적 민족주의의 전형으로 이해되는 미국의 민족주의도 결코 현실에서는 개인들의 그와 같은 순수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종족적 민족주의의 민족은 선택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귀속(ascription)으로 전제되는데, 이 또한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규정되는 민족주의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적 민족주의라고해서 순수하게 선택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는 없으며, 종족적 민족주의라고해서 완전히 선택이나 자발성이 배제되고 강제나 귀속적 정체성의 지배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에 따르면,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의 분석적 한계는 무엇보다도 '종족적'이고 '시민적'이라는 말 자체의 모호함에서 기인한다. '종족적'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매우 자명한 말 같지만, 이 말은 생물학적 혈통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정체성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은데, 전자라면 그와 같은 '종족적' 민족주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후자라면 모든 민족주의, 특히 '시민적' 민족주의를 포함한 모든 민족주의가 곧 '종족적' 민족주의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시민적'이라는 말도 의미의 모호함에 있어서는 '종족적'이라는 말보다 상황이 낫지 않은데, 엄격한 의미에서의 '시민적' 민족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낭(Ernest Renan)이 말한 것과 같은 일상적 국민투표(daily plebiscite), 즉 특정 민족의 구성원임을 매일매일 민족공동체성에 대해 동의를 의식적으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식의 민족주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현실에 이러한 유형의 민족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75] 반면에

75) 르낭은 "일상의 국민투표(everyday plebiscite)"를 민족의 실존 방식에 관한 은유(metaphor)라고 말한다. Ernest Renan, "What is a Nation?" [1882], *What is a Nation?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translated & edited by M. F. N. Gigliol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pp. 247~263, 인

시민적 민족주의의 현실 사례로 흔히 언급되는 프랑스나 미국의 민족주의를 문화적, 즉 종족적 측면을 배제하고 설명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시민적 민족주의 이론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르낭 자신도 민족을 정의할 때, "기억의 풍부한 유산의 공유"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에서 시민적 민족주의도 결코 순수하게 선택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닌 계승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지적된다.[76] 하지만 종족적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엄격한 의미를 벗어나려 하면 시민적 민족주의도 거의 모든 민족주의를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범주를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시민적-종족적 이분법은 모든 민족주의를 남김없이(exhaustive) 분류할 수 있는 설명력을 잃게 되며, 반대로 두 범주 모두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양자 모두에 속하는 중간 영역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호 배타적 범주, 즉 이분법으로서의 장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77]

셋째,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은 규범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미 시민적 민족주의는 바람직한 것인 반면에 종족적 민족주의는 위험한 것이라는 시각이 이미 개념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이 때문에 종족적 민족주의가 민족주의의 모든 부정적인 면의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모든 문제는 시민적 민족주의라는 일종의 만병통치약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주의는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에 직면하여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이나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용은 pp. 261~262에서.

76) Renan, "What is a Nation?," p. 261.

77) Rogers Brubaker, ""Civic" and "Ethnic" Nationalism," *Ethnicity without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pp. 132~146. 인용은 pp. 136~139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루베이커의 논의에 따르면,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은 분석적으로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모호성을 안고 있는데, 규범적 모호성은 특히 두 범주에 대한 명확한 가치 평가의 차이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민적' 범주가 '찬미'의 용어라면, 후자의 '종족적' 범주는 자동적으로 '욕설'의 용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가치 평가의 차이는 민족주의 현실의 복합성에 비추어봤을 때, 규범적 모호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의 모든 민족주의는 동시에 포용적이면서 배타적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현실의 다양한 민족주의는 포용과 배타성의 '정도'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포용과 배타성의 '근거 혹은 기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좋은 자유주의적이고 포용적 민족주의, 즉 시민적 민족주의와 나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인 종족적 민족주의의 규범적 이분법은 오히려 현실을 설명하는데 이점보다는 난점에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78]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의 중요 비판자 중 한 사람인 타미르(Yael Tamir)에 따르면, 서구 학계에서의 논의가 시민적 민족주의를 종족적 민족주의의 병폐와 위험에 대한 일종의 만병통치약(panacea)으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이러한 생각, 특히 시민적 민족주의를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전제하고, 반대로 종족적 민족주의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는 이분법은 두 가지의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분법은 서구 민족주의와 비서구(the East) 민족주의라는 이분법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서구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포용적이고 평화적이며 다원적인 반면에, 비

78) *Ibid.*, p. 141.

서구 민족주의는 인종적이고 종족적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이분법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적이라고 가정되는 서구 민주주의 내부에서의 인종적이고 종족적인 긴장의 확산을 무시하도록 만든다.

둘째, 이러한 이분법은 시민적 민족 내부의 정치와 사회에서 문화, 언어, 종교, 종족성, 그리고 인종의 역할을 간과해도 좋은 것처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정체성 정치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체성 갈등에 대해 대응할 정책수단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입헌주의, 보편적 권리, 그리고 평등한 구성원의 자격의 중요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이러한 원칙들만으로 현대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에 대응하면서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적 민족주의 담론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가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체제와 사회에 대한 우월감과 만족감만을 충족시켜주고, 당면한 대립과 갈등에 대한 행동보다는 회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79]

나. 시민적 민족주의 옹호에 대한 재검토: 시민적 민족주의의 배타성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 이분법의 명백함과 자명성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는 두 가지 범주 각각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특히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이 이분법의 중요성과 함께 재검토를 요하는 가정 중 하나는 로쉬월드(Aviel Roshwald)가 지적하는 것처럼 시민적 민족주의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반면에 종족적 민족주의는 그와 달리 '불관용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적 민족주의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자유주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자발

79) Yael (Yuli) Tamir, "Not So Civic: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Ethnic and Civic Nationalism?,"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2 (2019), pp. 419~434. 인용은 pp. 431~433에서.

적인 선택에 의해 공유된 정치 문화의 제한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어떤 선결조건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종족적 민족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불관용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80]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시민적 민족주의의 역사적이거나 현실적인 사례들을 관찰했을 때에는 결코 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점, 즉 현실의 민족주의는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이자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심지어 기존의 연구들은 오히려 시민적 민족주의의 소위 '시민성'이 전투적인 불관용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간접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81]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민적 민족주의의 '시민적 요소'의 탄생과정은 서유럽 지역에서의 근대 초기 종교 전쟁들과 박해의 역사와 결부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그것이 가톨릭, 칼뱅파, 루터파, 성공회 등 무엇을 지칭하든 간에) 정치체의 확립된 신앙"으로부터의 이단적인 종파로의 개종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종교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 믿음과 선택이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적 요소에 근거한 배타성은 20세기의 '매카시즘'과 같은 사례에서도 관찰되는 것처럼, 단지 과거의 시민적 민족주의 형성기에만 속하는 초기 현상이 아니라 시민적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논리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82] 서구 공화주의의 기원에는 근대 초기 고대 헤브라이즘에 대한 재발견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최근 연구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83] 또한

80) Aviel Roshwald, *The Endurance of Nationalism: Ancient Roots and Modern Dilemm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256.
81) *Ibid.*, p. 272.
82) *Ibid.*, p. 273.
83) Eric Nelson, *The Hebrew Republic: Jewish Sources and the Transformat*

대표적으로 종교와 종파 간의 관용을 주장한 서구 자유주의 사상의 선구자인 17세기 영국 정치사상가 로크(John Locke)도 구교도와 무신론자는 사회계약의 주체로 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듯이,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는 결코 모든 종류의 갈등을 초월하거나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한 종류의 갈등과 반목을 재생산 내지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84]

시민적 민족주의나 자유주의의 배타성이 자유주의 자체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된 사례도 존재한다. 선택한 신념에 의한 배타성이 자유주의 자체의 영향력을 가속시킨 대표적 사례로는 1870년대 독일에서의 문화투쟁(Kulturkampf)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투쟁은 독일의 신생 세속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도와 응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특히 교육과 성직자 임명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켜야만 한다고 본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의 의도가 가톨릭교회를 계몽주의의 적이라고 인식했던, 당시 의회 다수파인 자유주의자들의 인식과 맞아떨어진 결과로 촉발된 일련의 갈등을 지칭한다. 문화투쟁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독일 정치에서의 자유주의의 극적인 쇠퇴와 가톨릭보수주의의 민주적 기반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독일 자유주의의 장기적인 쇠퇴는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나치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특히 영국과 비교했을 때,

---

ion of Europea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Graham Hammill, *The Mosaic Constitution: Political Theology and Imagination from Machiavelli to Milt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84) John Locke,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and Other Writings,* edited and with and Introduction by Mark Goldie, (Indianapolis: Liberty Fund 2010); Jeffrey R. Collins, "Locke and Catholicism: The 'Roman Leviathan'," *In the Shadow of Leviathan: John Locke and the Politics of Con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pp. 271~314.

마치 독일에서는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주도적이거나 우세했던 적이 아예 없었다는 식의 완전한 정치적 망각으로 귀결될 정도로 그 여파가 적지 않았다. 특히 그 결과 독일의 근대화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근대화의 표준 경로가 아닌 특수 경로(Sonderweg), 특히 비자유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근대화인 것과 같은 인상을 깊이 남기게 된다.[85]

마지막으로, 유럽과 북미의 여러 분리주의 운동들 또한 시민적 민족주의의 이러한 자기정당화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웨일스, 스코틀랜드, 퀘벡 분리주의 운동의 중요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족적 정체성보다는 시민적 민족주의의 언어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운동이 실패했을 때, 예컨대 분리를 위한 주민투표나 국민투표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분리주의 운동 측은 주로 시민적 민족주의 전략을 동원한 것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시민적 민족주의 전략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종족적이고 문화적으로 특수한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86]

이러한 사례들은 시민적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내장된 배타성을 인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이 배타성이 극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적 정체성과는 이질적인 문화적 정체성과 양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 종족적 민족주의 비판에 대한 재검토: 종족적 민족주의의 시민성

시민적 민족주의가 결코 이론적으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순수하게 규범적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특징만을 보여주지 않는

85) 독일 자유주의의 민족주의와의 관계 및 부상과 쇠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Leonhard, "Liberalism and Nationalism," pp. 339~350.
86) Brubaker, ""Civic" and "Ethnic" Nationalism," pp. 134~135.

것과 마찬가지로 종족적 민족주의도 현실에서는 이념형과 달리 순수하게 부정적이고 위험한 특징만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민적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종족적 민족주의 또한 현실에서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아마도 3.1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일 것이다. 특히 3.1독립선언서는 종족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민족 정체성을 고수하면서도 이를 당대의 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종족적 민족주의가 반드시 비자유주의적이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정체성의 고수와 강제로 이어진다는 명제에 대한 확실한 반례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은 아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민족주의가 보여주는 종족성과 시민성의 결합, 혹은 양자의 경계의 모호함은 대표적인 종족적 민족주의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다. 종족적 민족주의의 역사적 원형으로 간주되는 고대 유대 민족의 헤브라이즘이나 고대 그리스의 헬라스주의 모두 공통의 조상의 후손, 혹은 공통의 혈통으로 맺어진 혈연 원칙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헤브라이즘의 경우에는 계약(Covenant)이라는 이질적 원칙에 의해 혈통 원칙이 상대화되는데, 계약은 특히 개종이라는 선택을 통한 유대민족으로의 소속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종족적 정체성과 시민적 선택의 경계의 모호함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또 다른 고대적 원형으로 간주되는 고대 그리스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흔히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에서 여성, 노예와 함께 시민의 정치참여로부터 배제되는 거류외국인의 경우에 공식적 입법과 기타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그리스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87]

87) Roshwald, *The Endurance of Nationalism*, pp. 259~260.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특징, 즉 종족적 정체성과 선택에 의한 합류와 통합 가능성의 공존은 또한 근대 민족주의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민족주의 역사의 초기에서도 그 사례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가 그러한 사례들인데, 이들 국가에서 종족적 정체성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20세기 초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국제주의가 공히 주장한 민족자결주의의 시민성과의 뚜렷한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다만 전간기의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이들 민족주의에 결합되었던 시민적 이상이 극적인 좌절을 겪게 되면서 인종청소와 대규모 학살 같은 파국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도 사실이다.[88]

3. 민족 동질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적 보편 가치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필요성

가.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의 단순 이분법 극복 필요성

자유민주주의적 보편 가치에 대한 강조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간의 상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단순한 이분법, 특히 전자의 무조건적 긍정과 후자의 무조건적 부정의 규범적 이분법에 대한 극복이 요구된다. 만일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 사이의 엄격한 이분법을 그대로 전제하면서 자유민주적 보편 가치를 강조하고 동시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후자의 정책 수단의 효과는 무시되거나 간과되기 쉽다. 게다가 자유민주적 보편가치의 주장이 반드시 포용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현대의 민족주의는 '일상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는 특별하게 철학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는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의식하지 않

88) *Ibid.*, pp. 260~263.

지만 또한 그래서 의심하지도 않는 '상식'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개인에 대한 민족의 우위를 강조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주장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민족'이나 '민족주의'의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민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의 발화자와 청중 모두 '민족'을 말하거나 듣지 않아도 그 대상이 '민족'이라는 점에 대한 암묵적 전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89]

그런 점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반근대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위험을 극복하면서 시민적 민족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족주의 자체의 배타성이 극복된다고 가정하기는 힘들다. 심지어 시민적 민족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무리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일정한 정체성 혹은 경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들며, 시민적 민족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그러한 정체성이나 경계와 긴장관계에 있는 보편적 가치나 원칙에 대한 고수가 아니라 그것이 기대고 있는 정체성 및 경계를 확고히 하는 결과로만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그 경우 현실에 존재하는 정체성이나 경계에 대한 강조가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의 민족 동질성 조성이나 회복에 대한 추구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자유민주주의적 보편가치의 포용적 확산과 배타성이 완화된 민족 동질성 담론의 필요성

자유민주주의적 보편가치와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또 다른 쟁점은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 하는 점이다. 민족주의에 의한 갈등 및 분쟁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맥락에서

89) Michael Billig, *Banal Nation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1995).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고려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권력과 권위가 중앙집권적인 형태와 분산된 형태를 구분한다.[90]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앞서 검토하였듯이 종족적 민족주의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사 제국적인 질서라 하더라도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형태의 정치질서가 선호되었던 이유도 있고, 실제로 자유주의 정치사상이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정치질서보다는 연방 혹은 연합제적 국내질서 혹은 국제질서를 선호해온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91]

또한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시민적 민족주의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동부 유럽 민족주의의 종족적 특수성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모델에 대한 지나친 모방, 특히 그 중에서도 서구에서의 성공적인 중앙집권 모델로 인식되어 온 프랑스 공화국 모델에 대한 모방이다. 문제는 이러한 엄격한 중앙집권적 모델에 대한 모방이 동부 유럽의 신생국, 특히 언어적으로나 종족적으로 분할되는 인구를 통합한 신생국에는 적합하지 않은 대안이었으며, 이로 인해 종족적 갈등의 반작용이 보다 심화되었다는 것이다.[92]

물론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 문제를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민족주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단 이후 남북한이 각각 형성해온 정체성과 그것의 관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단일국가의 중앙집권적 형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 및 모방이

90) 대표적으로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91) Isaac Nakhimovsky, *The Holy Allianc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ed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4).

92) Roshwald, *The Endurance of Nationalism*, pp. 263~264. 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붕괴된 20세기 초 상황에 대한 진단이지만, 이와 유사한 서구에 대한 모방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소련과 공산권 붕괴 이후의 동부 유럽 국가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된다. Ivan Ktrastev & Stephen Holmes, "Explaining Eastern Europe: Imitation and Its Discontents," *Journal of Democracy*, Vol. 20, No. 3 (July 2018), pp. 117~128.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분명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이분법이 본질적으로 유럽과 서구 세계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동아시아와 제3세계 민족주의의 고유성을 연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범주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의 단순한 이분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범주를 한국과 북한의 민족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 그리고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서구에서 유래하는 범주를 어떻게 동아시아와 한국의 맥락으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맞고,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반전체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민족주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의 범주를 우회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93]

특히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현재적 함의 도출의 필요성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신기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족민족주의의 획일적인 본질과 기능을 가정하거나 선험적인(a priori)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것이 수행해온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정치적 상황들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은 한국 민족주의 담론과 논쟁 전체로 확장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94]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배타적인 정당성을

93) 대표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 논의에서 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의 범주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신기욱 저·이진준 역,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파주: 창비, 2009); Dong-ho Han & Yeowon Lim, "The Rise of Ethnic Nationalism in South Korea: Moon's North Korea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Asian Perspective*, Vol. 47, No. 2 (2023), pp. 291~312.

94)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p. 37. 한국 민족주의를 전적으로 종족적 민족주의로 보는 신기욱의 시각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시각으로는 다음을 참조. 박찬승, "탈식민, 해방과 '민족', '민족주의 담론'",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둘러싼 대결의 장이었을뿐만 아니라 “새롭고, 근대적이고, 생존력있는 민족됨을 탐구한 정치적 공동체의 다양하고 경쟁적인 관점들의 풍부한 저장소였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95] 식민지배를 받은 과거와 분단이라는 현실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배타적 정당성을 갖춘 단일 정체성의 이름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변화되어야 하며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논쟁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민족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말한다는 것이 곧 한국의 근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에 관해 말하고 논쟁하는 것이었다는 시각에서 한국의 민족과 민족주의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재검토와 재조명이 필요하다.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 (서울: 한국사회학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국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2009), pp. 1~22.

95)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p. 39.

Ⅳ.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반박과 대응

1. 반박

〈반박 ①〉 반통일, 한민족 부정은 역사적 착오이자 자기부정이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을 넘어 통일론을 폐지하려는 것은 사실상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역사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비난하고 반박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바탕에는 5천 년 민족사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두 국가관계로 고착화되어 영구분단이 되는 것은 반역사적이며 반통일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마저 부정하는 행위는 역사적 착오이자 부정으로 비난해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기 통일을 목표로 존재했던 대남기구들을 정리·개편하는 차원에서 먼저 김일성 시대 상징물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반대되는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통일을 논의할 수 없다며, 대남 대화 및 협력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 협력국,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스스로 김일성, 김정일 시기의 남북관계 역사를 부정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에도 남북 간에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적지 않았으며,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2차례의 서해 해상에서 충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마주 앉아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미 있는 합의들을 이끌어냈다.

북한이 사회 전반에서 하나의 민족의 개념과 통일 개념을 제거하는 사상투쟁에 나선 만큼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새로운 통일담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하며, 한민족 부정은 역사적 착오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통일지향적 남북 특수관계를 실천해야 한다. 북한이 동족 관념을 파괴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민족공동체를 강조하고 탈

북자와 북한 인권, 인도적 지원 등 북한 동포에 대한 법적·도의적·인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북한의 말과 문화의 동질화를 추구하고 통일 의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96] 1974년 동독이 헌법 개정을 통해 반민족, 반통일을 선언하고, 호네커는 2민족 2국가론을 내세워 동서독은 동일 민족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나라라며 통일을 막아 국가의 소멸을 막고자 하였으나, 같은 민족임을 내세운 서독에 흡수통일된 사례를 부각시킬 수 있다.[97]

〈반박 ②〉 관계의 차단은 고립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대결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미-일 협력체와 북-중-러 협력체가 공고히 형성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적대인식을 보이고 있고,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정함에 따라 남북한 간 관계 회복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과 반박이 없다면 향후 남북한 간의 관계는 단절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분단체제가 영구적으로 정착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결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에게 남북관계 차단은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해야 한다. 관계차단은 북한 스스로 고립을 더욱 자초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해야 한다.

---

96) "[김천식의 통일직설] 영구분단 대 자유평화통일 한반도," 『서울신문』, 2024.2.22.,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opinion/reunification-kcs/2024/02/22/20240222031006〉 (검색일: 2024.5.27.).

97) 이봉기, "동독의 2국가 2민족론의 전개 과정과 배경,"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39, 2024.5.30.)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364&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4.6.3.).

현재 남북한 관계를 '줄다리기'에 비유해볼 때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황은 남북한 모두 줄다리기를 하던 도중 북한이 한쪽 줄을 일방적으로 놓아버리려는 상황이다. 남북한 간 지속되던 경쟁, 협력 등의 줄다리기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질 위기에 빠진 것이다. 북한이 놓아버린 줄을 한국마저 손에서 놓아버린다면 더 이상 땅에 떨어진 줄을 들어올리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더 이상 줄다리기를 재개할 가능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즉 영구분단의 분위기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대결의 자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손에서 줄을 놓아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사실상 대화 채널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양측 간 대화를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과의 대화 시도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최근 전임자들의 유훈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남북한이 공유하는 민족적 동질성 및 양자 간의 특수한 관계를 중심으로 규범적 측면에서 영구분단이 지양되어야 하는 점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규범적 측면에서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보다 현실적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북한 정권에게도 장기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고립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재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때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라고 반박해야 한다.

〈반박 ③〉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해 책임 전가 말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 중에는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선 북한은 한반도가 분단 이후 긴장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

이기에 필연적으로 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한반도는 한국과 미국이 '반공화국대결광증과 군사도발책동'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위기상황이 항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 정책이 폭력적이라 주장한다.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군사대치 상황은 우연적 현상이 아닌 역대 남한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그리고 그 사상적 기초가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여전히 명기되어있기에 통일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자신들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해,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착오라는 파악하고 있다. 셋째, 핵을 보유한 북한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 상승으로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민족 즉 동족이라는 수사에 얽매여 미국 의존 일변도의 남한과 통일문제를 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상승한 북한의 국가적 지위와 불일치하다는 것이다. 대등한 관계에서 통일을 불필요하고 핵을 보유한 북한 자신들의 입장에서 통일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논리적 근거는 모두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한국과 미국에게 있다는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우선 한반도 불안정성과 군사적 대치 등의 책임이 한국과 미국에 있고, 북한 자신들을 주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일종의 아전인수라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의 긴장상황의 원인은 북핵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1990년대 이후 북핵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나타났지만, 북핵협상의 경색국면이 현재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초래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은 남과 북 모두의 책임이 있는 상호적인 현상이다.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뒤집어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반박할 수 있다.[98]

역대 국방백서를 보면 정부의 공식적 입장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전개되었다. 1995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주적 표현을 사용한 이후[99]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개념 대신에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했고,[100]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으로 순화되어 사용하기도 했고,[101]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하기도 했다.[102] 2022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기에 침략에 대비해야 함과 동시에 한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재난 및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103] 하지만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당규약이 8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최종목적을 한반도 전역에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명시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표 Ⅳ-1〉 참조). 한국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북한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전세계의 소수 특정국가에서도 조차 실현되지 못한 실패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반박할 수 있다. 북한은 스스로 억지 주장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98) 강혜석, "북한의 두 국가론, 민족부정론에 대한 반박 및 대응 논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문자료, 2024.6.5.).
99)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p. 18.
100) 대한민국 국방부, 『200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5), p. 48.
101)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p. 34.
102)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 33.
103)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3), p. 39.

<표 Ⅳ-1> 북한 당규약에 규정한 당의 목적(1946~2021)

구분	당의 목적
1차 (1946.8)	조선로동당은 조선근로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로서 조선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적 조선 독립국가건설과 근로대중의 정치, 경제 및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함.
2차 (1948.3)	북조선 로동당은 조선근로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로서 조선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근로대중의 정치 경제 및 문화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함.
3차 (1956.4)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4차 (1961.9)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5차 (1970.11)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6차 (1980.10)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3차 당대표자회 (2010.9)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4차 당대표자회 (2012.4)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7차 (2016.5)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8차 (2021.1)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출처: 저자 정리

〈반박 ④〉 반통일은 적대와 폭력이다

북한이 제기한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는 그 자체로 적대성과 폭력성을 가진 것으로 상당히 위협적이라 비판할 수 있다. '적대적', '전쟁 중', '교전국'을 표현한 말 자체에서도 도발적이고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만 두 국가관계라는 의미에서도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관계로 볼 때 충돌의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 이론에서 행위자를 국가 대 국가로 상정할 때 해당 국가의 관계는 협력이 아닌 적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항상 상대 국가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고 우위에 서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도록 해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족이 아닌 적대적인 국가를 상대로 핵위협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할 수 있다.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전쟁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위협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104]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전쟁을 '행위(action)로서의 전쟁'과 '상태(status)로서의 전쟁'으로 구분하는 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직접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적대적인 '상태로서의 전쟁'을 넘어 직접적인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전쟁'이라 위험하다.[105]

중요한 점은 과거 한국 학계에서 제기된 두 국가관계론과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관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남북 간 공통점보다는 이질성, 차별성이 커지면서 국가 대 국가로 분리되어 각자 공생을 추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

10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문," 『로동신문』, 2023.12.31.
105) 오오다케 코지 지음, 윤인로 옮김, 『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부산: 산지니, 2020), pp. 151~153.

만, 이는 적대적인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의 공존을 원하는 것이었다.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이 전쟁없이 평화공존을 추진하자는 응답이 57.7%로 통일의 필요성 25.6%보다 높게 나왔는데, 2016년 조사 이후 그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106]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두 국가관계는 평화공존을 위한 목적인데 반해 북한은 적대적인 대립을 상정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면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분단의 지속에 따른 이질성이 증대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반도가 평화공존이든 적대적 공존이든 상관없이 영구분단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한반도 두 국가관계를 배격하고, 국민적 통일의 의지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박 ⑤〉 특수한 남북관계 그 자체로 역사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하기에는 분단체제로 인한 각종 모순이 그대로 남아있고, 남북 간 역사적인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즉 남북 간 분단체제가 다른 국가 간 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국가 간 관계가 그대로 분단체제에 적용되기도 어렵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모순들을 방치하고 일순간에 국가 대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은 적대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적대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107]

106) 이상신·민태은·박주화·이무철·윤광일·구본상,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요약보고서』 (통일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2024.6.27.), p. 18.
107) 이무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뿐더러 한국 사회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내용을 비판한 것과 같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혼란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정부가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했다고 하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왜곡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정권붕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남북정상은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남북 간 상호 접촉과 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며 이를 부정한 사례는 없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분단건국 당시부터 '남조선혁명론'을 기조로 하고 있기에 '남조선혁명론'이 오히려 흡수통일에 가깝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2023년 8월 김정은은 전쟁 발생 시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소위 '남반부 영토점령론'이라는 도발적인 표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108]

2. 북한의 향후 조치사항 전망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인식 등을 배경으로 삼아 논리적·역사적·현실적 정합성이 상당히 낮으며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이른바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을 강변하는 김정은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먼저, 김정은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p. 78.

10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시고 전국지휘훈련진행정향을 료해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8.31.

이 대남정책 전환을 전격적으로 선언한 이후 북한은 대남 군사적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김정은이 제기한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과 관련해 남한 등에서 각종 반론 등이 이어지고, 북한의 대남 위협 강화에 대응해 남한에서도 각종 조치가 취해지는데 대해 북한은 다소 복합적인 대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비군사적인 부문에서의 대남 복합 대응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끝으로,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 관련 지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남한과 연결된 각종 수단을 파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없애는 동시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과 관련한 북한 내 흔적을 대대적으로 지우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 역시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대남 군사적 위협 강화

김정은이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을 본격 제기한 이후 북한은 대남 군사적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반년 동안 이뤄진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살펴보면, 최근 3개년 평균치인 44.3건 가운데 10.3건(23.3%)이 군사분야 공개활동이었는데, 김정은이 대남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전체 64건의 공개활동 중에서 30건(46.9%)가 군사분야 공개활동이었다(〈표 Ⅳ-2〉 참고). 특히, 이 가운데 3건만 2023년 12월에 이뤄졌으며, 대부분인 27건은 김정은이 대남정책 전환 등을 선언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후인 2024년 1~5월에 이뤄졌다. 김정은은 2024년 1~2월에 벌인 군사분야 공개활동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적 대비태세 완비, 전쟁 준비 강화, 군사력 증강과 군수산업 역량 증진 등을 반복해서 주문했다.[109]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2024년 3월에만 각종 군사훈련 지도·참관

을 5회나 진행한 김정은은 2024년 3~5월에는 총 19건의 군사분야 공개활동을 벌이며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남 위협 강화를 더욱 강조했다.[110]

<표 Ⅳ-2> 김정은 공개활동 세부 동향: 2020년 이후 매년 12월~차년 5월

구 분	정치	군사	경제	기타	계
2020.12~2021.5	18건	3건	4건	17건	42건
2021.12~2022.5	16건	12건	7건	20건	55건
2022.12~2023.5	9건	16건	4건	7건	36건
3개년 평균	14.3건	10.3건	5건	14.7건	44.3건
2023.12~2024.5	14건	30건	9건	11건	64건
3개년 평균 대비 증감율	-2%	+191%	+80%	-25%	+44%

출처: 김갑식·장철운, "북한 최고지도부의 '24년 3~5월 공개활동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40, 2024.6.7.), p. 5 〈표 4〉의 내용 중에서 김정은 공개활동만 발췌.

또한 북한은 2024년 들어 이전보다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등을 더욱 많이 발사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북한 군사분야 동향에 따르면, 김정은 참관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 북한이 진행한 미사일 등의 발사는 총 15회였는데, 이 가운데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전술 탄도·순항 미사일 등의 발사는 11회(73.3%)에 달했다. 그런데 북한은 2024년 들어 1~5월에만 총 17회의 미사일 등 발사를 단행했으며, 14회(82.4%)가

109) 김갑식·장철운, "북한 최고지도부의 '23년 12월~'24년 2월 공개활동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20, 2024.3.6.), p. 3,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289&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4.6.9.).

110) 위의 글; 김갑식·장철운, "북한 최고지도부의 '24년 3~5월 공개활동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40, 2024.6.7.), p. 2,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368&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4.6.9.).

남한 타격용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등의 발사였다.[111] 특히, 북한은 2024년 들어 이전까지 선보인 적이 없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인 '불화살-3-31'과 지대함 순항 미사일인 '바다수리-6'과 같이 새로운 순항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전후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240㎜ 방사포탄에 유도기능을 탑재하는 등을 통해 이른바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240㎜ 방사포탄의 성능을 검증했다. 북한 240㎜ 방사포의 사거리(최대 40㎞)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신형 240㎜ 방사포탄 개발은 북한군과 직접 마주하는 남한의 최전선 지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 대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더욱 증대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112]

이러한 맥락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도 북한은 김정은의 군사분야 공개활동 및 각종 미사일 등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대남 위협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북한이 전격적으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했던 대남 국지도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도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상도발과 관련해 북한 함선의 동·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침범 및 이에 따른 무력 충돌 가능성, 북한이 이른바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는 대형 어뢰 등을 남한 해역으로 잠항·침투시킬 가능성, 천안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 1990년대까지 북한이 종종 자행했던 반잠수정·잠수함의 대남 침투 가능성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11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rend/list.do〉 (검색일: 2024.6.9.).

112) 홍민, "김정은의 중요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 및 240mm 신형방사포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35, 2024.5.14.), p. 7,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357&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4.6.9.).

지상도발과 관련해서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침범 및 인근에서의 총격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내 지뢰 등 설치 가능성,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확성기 방송 지점 타격을 위한 고사총·포 발사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공중도발로는 각종 무인기를 남한 지역으로 침투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13] 북한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 3월과 동년 5~6월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는 대남 도발을 약 1,500건 감행했는데,[114]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가 일상적인 대남 도발로 굳어질 가능성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비군사적 대남 복합 대응

김정은이 이른바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후 남한에서 반론이 제기되는 동시에 다양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는 데 대해 북한은 다소 복합적인 대응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북한은 남한 등에서 제기되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에 대한 반대와 반박 논리에 사실상 무시하거나 거의 대응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실례로 김정은이 제기한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 모두에 대해 남한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상황이며,[115]

113) 장철운,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 가능성 검토,"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02, 2024.1.8.), pp. 3~4,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213&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4.6.9.).

114)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8), p. 268;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2), p. 352; "'북 GPS 교란공격' 누적 1천500건 육박…"일상 피해는 미미"," 『연합뉴스』, 2024.6.3.

1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알앤씨(주)에 의뢰해 2024년 3월 22~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가구전화 20%, 휴대전화 80%)를 통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이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5%,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일비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로 각각 나타났다. 추이변화 관찰이 가능한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김정은이 이러한 비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한 배경 등과 관련해 다양한 반박 논리 및 분석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내놓지 않으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남한이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 등을 반박하자 북한은 김정은의 관련 언급을 반복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행태를 보이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달리 2024년 들어 남한 내 일부 민간단체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전단을 만들어 비닐풍선 등을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살포하자 북한은 오물 또는 쓰레기 등을 가득담은 비닐을 고무풍선에 매달아 남한으로 보내는 방식 등과 같이 다소 비대칭적이면서도 비교적 낮은 수위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북한이 과거에 보였던 행태와는 크게 다르다. 북한은 과거에 남한 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한 체제를 비방·중상 및 비난하는 내용의 대남전단을 만들어 남한 지역에 살포하는 등과 같이 대칭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던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북한은 과거에 대북전단이 매달린 비닐풍선을 공중에서 터뜨리겠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남한 지역에 고사총을 낙탄시킨 적이 있고, 전임 정부 시절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해 만들어졌던 남북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하는 등과 같이 매우 과격하고 수위가 높은 방식으로 대응한 적도 있다. 한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남한 군 당국이 대북확성기

는 2024년 1분기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 4분기의 64.0%보다 6.6%P 상승한 것이다. 직전 분기 대비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대남노선 전환이 남한 내에서는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기대했을지 모르는 상황(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에 대한 남한 내 동조 또는 찬성)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남한 내 통일 의식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여론·동향(2024년 1분기)』 (2024.4), p. 28, p. 31, pp. 47~48.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북한은 대남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방송 재개를 준비하는 등과 같이 다소 대칭적인 대응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복합적인 비군사적 대응 양상은 앞으로도 일정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2023년 말 느닷없이 제기한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은 총론적 측면에서 논리적·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논리성 및 비현실성은 남한 내에서 김정은이 제기한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되는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과 관련해 남한 내에서 제기되는 각종 반론과 비판에 북한이 반박할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김정은의 관련 언급을 되풀이하는 것을 넘어서는 대응책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관련 언급 이상으로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에 관한 논리를 새롭게 제시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강변 일색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논리가 남한 내에서 수용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더욱 강력한 반론 및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에 대한 남한 내 반론 및 비판에 앞으로도 북한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한 내 일부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과 남한 군 당국에서 실시하는 대북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은 대체로 대칭적인 양상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풍향 등을 감안해 2024년 6월 중순 들어 이뤄지지 않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도 일단 멈추며 다소 소강국면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그렇지만 남한 내 민간단체는 풍향 등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향후에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남한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 군 당국에서 실시하는 대북확성기 방송이 2024년 6월 9일 오후 2시간 정도 재개된 이후 동월 17일 현재까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북확성기 방송이 다시 실시될 경우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 송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대남·대미정책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여정은 2024년 6월 9일 밤늦게 발표한 '담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이다.[116] 김여정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의미하는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 온 언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남한의 조치에 비례하는 동시에 대칭적인 형식 및 성격의 행동으로 북한이 앞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기 위해 북한 입장에서 남한의 조치보다 조금 더 과감하면서도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에 직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대남 연결고리 철폐 및 대내적 흔적 지우기 지속 추진

김정은이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후 북한은 자기들 영역 내에서 대남 연결고리 철폐 및 대내 통제 강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북한은 그동안 남북한 간 통로로 기능해왔던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등을 파괴하거나 지뢰를 매설하는 등의 방법

116)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4.6.9.

으로 불능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이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후 노동당 중앙위 차원에서 대남정책을 관장했던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를 '대적지도국(10국)'으로 변화시키고 대남 심리전 기능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17] 또한 북한은 당국 차원의 남북한 간 대화에 북한 대표로 참여했던 내각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경협 사업에 관여했던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고 결정했다.[118]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 등에 관여했던 북한 기관·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국민족통일협의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등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119]

이와 함께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하며 지시했던 사항들을 매우 빠르게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이 철거하라고 지시한 지 1주일여 만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과 근처에 설치된 김일성의 '조국통일명제비'를 철거한 것으로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고, 평양 지하철에 있던 '통일역'의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역'으로만 표시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애국가'에서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사했고, 기존에 조선중앙TV에서 날씨 소식 등을 전할 때 사용했던 한반도 지도도 일정하게 변형해 사용하고 있으며, 통일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등의 기사도 사후적으로 삭제하고 있다.

117) "김영호 "北의도만 믿으면 오판·안보문제 우려"…文회고록 비판(종합)," 『연합뉴스』, 2024.5.20.; "통일부 "옛 北통전부 '대적지도국'으로도 불려…심리전 강화"," 『연합뉴스』, 2024.5.24.

1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함에 대한 결정," 『조선중앙통신』, 2024.1.16.

119)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대남정책전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군들의 궐기모임," 『조선중앙통신』, 2024.1.13.;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대남정책전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군들의 궐기모임," 『조선중앙통신』, 2024.3.24.

북한 전역에 산재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 등에서 '조국 통일' 등의 표현을 북한 군인들이 페인트로 하나하나 지우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으며,[120] 최근에는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철책 사이 일부 구간에 장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연결고리 철폐 및 대내적 흔적 지우기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불능화 조치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남북한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던 수단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북한 노동당의 대외부문 외곽단체 및 사회단체 중 하나이면서도 주요한 대남 창구로 기능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도 향후 일정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외에도 북한 전역에 산재해있는 각종 기념물 등에서 김정은이 터부시한 표현 등을 삭제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언명 및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 주민들의 동요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대대적인 궐기대회 등이 개최되지 않는 가운데 비교적 조용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느닷없이 제기한 비논리적이며 비현실적인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김정은이 그의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뿐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의 지난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을 넘어 정반대로 부정하는 강변이라는 측면에서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북한 당국의 고심이 깊고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과 관련한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논리와 명분이

120) "[북한 통신] 군인들, 페인트통 들고 '통일' 지우기 나서,"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de-unification_nksoldiers-06042024154230.html〉 (검색일: 2024.6.17).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지시를 설명하고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두 국가론 및 한민족 부정론이 갖는 비논리성 및 비현실성, 비역사성 등 때문에 어쩌면 북한 주민들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북한 당국이 향후 고민해야 하는 가장 큰 지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대응방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단호성' 원칙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적대적인 대남·대미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이라 규정하고 핵 선제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위협상황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대남관계에 대해 강대강 원칙과 정면투쟁의 기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및 국지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긴장조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고 주변국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 대처는 향후 더욱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기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의 관계를 '교전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되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확전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원칙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갈등

구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한민족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성' 원칙이다. 사실 남북한은 서로 상대를 같은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과 함께 적대와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하지만 냉전시기에도 남북 간 체제경쟁과 대결구도에서는 남북이 서로 흡수통일, 적화통일을 꾀하며 대립하고 갈등했지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은 유지했다. 한민족은 천년 이상을 하나의 언어, 역사, 문화, 관습,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온 하나의 민족공동체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한 정책의 '일관성' 원칙이다.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단계 통일방안 중 국가완성단계인 1민족 1국가의 형태를 위해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시켜야 한다. 대북정책에서도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과 같은 적대와 증오가 담긴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영구분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비타협성' 원칙이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성, 분리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단상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 평화와 통일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라는 점, 당면하여 평화와 평화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설득과 동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영구분단은 곧 대결과 적대,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기에 북한이 통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더라도, 한국 내부에서는 통일하지 않겠다고 입장이 우세하거나 이러한 입장으로 정책이 변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한민족 간의 통일은 요원하고 영구분단이 발생하는 역사적 실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이나 한민족 부정론에 입각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정책이 한국 주도 하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에 비롯되었다고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자유, 민주, 평

화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통일론을 유지하며 영구분단으로 이어지는 길을 막아야 한다.

이상의 단호성, 불가분성, 일관성, 비타협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 재확인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관계는 교전국 관계'라는 논리에 맞서 한국정부는 평화통일의 추진 의지를 더욱 강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평화통일 조항(전문, 4조)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66조) 등을 국내외에 상기시키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의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북한은 유사시 남한 점령, 편입, 수복 등을 강조하며 '북한판 흡수통일'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반박논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추진하되 통일 이후 선택하게 될 정치제도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 4조의 국가정체성을 토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라는 통일 담론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 4조에 입각하여 명확한 통일담론을 제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 인권, 자유, 법치, 시장 등의 가치를 통해 남북연합이 남북한의 어색한 동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체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흡수통일=제도통일'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흡수통일과 제도통일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향후 북한이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남북 간 무력충돌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1950년 한국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점에서 폭력적인 방식의 문제해결을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다.

나. 자유, 평화,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는 통일담론 주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통일, 평화, 민족이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추진했다. 2010년 당 규약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자고 언급했고, 2021년도 당 규약에서도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고 언급했다.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통일, 평화, 민족이라는 핵심 가치를 부정할 경우 스스로 당 규약의 내용을 부정하게 된다. 이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만 부각시키게 되는 이데올로기 빈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 통일, 민족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역대 북한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했기에 통일, 민족의 부정 그 자체로 김정은 정권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도 괴리된 수령-당-국가의 관계에서 분단으로 인해 통일이라는 특수상황을 거부할 경우 북한주민을 설득할 명분이나 대체재가 사라지게 된다.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합의했으며, 이러한 원칙 속에 민족적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통일을 이룩하자고 합의했다. 1972년 이후 남북 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 속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하며 과거의 원칙을 없애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폐기 주장에 대해 기존 평화통일 원칙을 계승하되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민족, 통일이라는 개념을 폐기한 빈공간을 우리가 차지하며 주도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겠다. 북한이 보편적 가치들을 거부하고 부정할수록 한국은 보편적 가치들에 대해 더욱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자유-평화-민족공동체'로 보완하여 통일담론을 주도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통일담론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반통일, 반민족 인식 그 자체로 한국의 민족적 정통성, 평화통일의 적통이라는 위상 강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자유, 평화, 민족 등의 통일담론을 주도해야 하겠다.

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 담론의 의제화 추구

민족 동질성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특수한 맥락과 배경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일방적으로 부정한다고 쉽게 사라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정부는 김정은의 한민족 담론 부정에 담긴 자기모순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일제 강점기 항일무장투쟁과 한국전쟁 이후 반미 제국주의 투쟁의 역사에 기반하여 민족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확보하고 강화한 사례가 있다. 주체사상 형성과 백두혈통 이념화 과정에서도 사회주의 이론과 관계없는 유교적 가족주의를 강조하고 주민들의 충성과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기도 했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시했던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부인하고 민족동질성 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책 전환이 야기할 내부 혼란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정통성 부정은 물론 남북 간 한민족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근거하여 북한의 한민족 개념 부정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한다.[121] 이산가족 상

봉 재개, 납북자 송환, 언어 및 사회문화 교류 등 단일민족 개념에 기반한 남북관계 쟁점 사안들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 지구상 유일한 단일민족 분단국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기반으로 통일 공공외교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포럼(KGF) 행사에 한반도 현안뿐만 아니라 민족분쟁을 겪었던 코소보, 로힝야족, 쿠르드족,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포함시켜 한반도에서 민족 담론의 지속적 의제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할 수 있다.

라. 군사적 억제와 평화관리 노력 강화

김정은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쪽과 북쪽의 물리적 연결 고리를 모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교적국 관계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향후 중저강도 남북 간 군사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24년 초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남북을 잇는 동해선과 경의선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 가로등과 철로 레일까지 제거하고 있으며, 북방한계선(MDL) 10곳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전술도로 보강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관계의 차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두 차례 침입하였고, 이에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따라 퇴각하였으며, 합참은 이를 '단순침범'으로 판단하기도 했다.[122] 또한 2024년 5~6월 서해안 지역의 GPS 교란,

121) 성기영, "북한의 2개 국가론에 대한 반박 및 대응 논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문자료, 2024.5.31.).
122) "북한군 수십 명 대낮 휴전선 넘어…軍 "작업 중 길 잃은 듯"," 『한국일보』, 2024.6.11.

오물풍선 투척 등 다양한 형태의 중저강도 도발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6월 4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단계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차원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개시했다. 한국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통해 군사분계선과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군사합의 이전으로 복원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차단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와 외교활동으로 대응했다. 중요한 점은 정부는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과 같이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수십차례의 경미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남북 간 충돌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더 큰 충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한미일 3국 간 정보 및 정찰 결과 공유, 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지역 안정과 국제질서에 미치는 순기능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교전국' 주장에 말려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남북의 물리적 연결고리를 모두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오물풍선 도발은 단순히 방어용이나 혹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매우 치밀하게 짜여진 대남 군사도발을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발표한 만큼 오히려 접경지역 주변에서 고도로 계산된 군사적 도발에 나섬으로써 남북 간 충돌의 책임이 정부의 합의 효력 정지에 있다며 대남전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 충돌과 전쟁 억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123] 또한 8월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123) 강인덕, "특별대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통일연구원 통일 대토론회(2024.5.14.) 원로대담," 『통일연구 브리프』 (서울: 통일

방패(UFS) 훈련 시 이에 상응하는 북러 연합군사훈련 실시, 군사적 대결 구도 선포 외에도 영토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NLL 해상 군사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영해 라인을 선포하여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124] 따라서 정부는 먼저 북한의 남북한 간 물리적 연결 고리 차단 행위를 군사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남 도발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125] 특히 오물풍선 도발도 신종 침투 수단으로 간주하여 북한이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방공망을 시험하고, 대남 이동 경로를 시험하여 향후 드론 및 무동력 비행체 공격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4년 6월 4일을 기점으로 '9.19 군사합의' 전부에 대한 효력정지를 단행하여 군의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 만큼 북한의 신형 도발 행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확고한 대응 태세를 마련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미연합 훈련 시 북핵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같은 북한의 신형 도발에 대한 한미 대응 태세도 함께 공개하여 북한의 기습 도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마. 북한 주민 대상 통일의식 함양 방안 마련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서 한국은 북한 지역의 영토와 주민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와 책무가 있다.[126]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의식 함양 고취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외교

연구원, 2024), 2024.05-06, Vol. 4, p. 39.

124) 성기영,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와 분석 및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ISSUE BRIEF』, 제566호, pp. 3~5.

125) 이승열, "북한의 두 국가론의 전략적 의도와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문자료, 2024.6.21.).

126) 김천식, "권두칼럼: 통일 기본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준비하자," 『통일연구 브리프』 (서울: 통일연구원, 2024), 2024.05-06, Vol. 4, p. 6.

는 타국 정부와 여론형성층,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자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공공외교의 목적은 타국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남북통일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설명함으로써 이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공공외교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 및 여론주도층, 그리고 대중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접근방법 모색도 필수적이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한민족 부정 관계가 아닌 통합성과 동질성을 지향하고 달성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북한 주민대상의 통일공공외교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적 억압, 경제적 빈곤, 사상적 탄압의 근본 원인이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장기 세습체제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한 간 정치적 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 정권이 '한민족·통일 부정'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한 간의 민족적 동질성과 역사적 뿌리에 대한 인식이 북한 지역에서 희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북한 간에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여전히 이질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적으로는 동질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도모하는 방향과도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의 폐쇄성 및 사회통제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공공외교는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한 접근법 모색 강구가 필요하다.

바. 한민족 디아스포라와의 유대와 연대 강화

북한은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의 후속조치로 해외 한인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통일전선부의 기능까지 축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전선부의 활동이 축소된 이상 북한의 해외 한인에 대한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높은 한민족 동포들에 대한 유대와 연대를 강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만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적통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동포들을 통일한국의 우군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진정한 한반도의 남북통일의 근간이 한민족 통합에 있음을 설파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와의 유대와 연대를 강조할 수 있다.

700만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일본 조선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동포를 대상으로 민족적 동질성과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조선시대 말기부터 해방 시기까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인 고려인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대략 4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고려인들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러시아 고려인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 등 구소련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려인 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규범적이고 역사적 정당성을 지닌 한국을 중심으로 해외동포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남북한 간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강조해야 한다. 한민족 혹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영구적 평화는 한민족의 통합을 실현하는 통일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사. 초국적 이슈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방안 마련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상 남북이 기후·생태환경을 공유하는 지점이 많기에 남북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방안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남북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 구조 및 잠재적인 긴장 완화를 통한 공통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간 기후위기 관련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기후·생태환경 문제의 특성상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초국적 이슈이기 때문이다.[127]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한반도 내 위기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후·생태환경 협력을 위한 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128] 북한 역시 김정은의 홍수, 태풍 피해 지역의 현지지도와 조속한 후속조치 지시를 통해 기후·생태환경 변화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한미의 대북 군사적 위협을 비롯하여 이상 기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목하고 있다. 기후위기라는 초국적 이슈에 대해 남북 간 공동의 관심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로 지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여 남북 간 한민족,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석을 다질 수 있다.[129]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은

127) 이무철 외,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23), KINU 연구총서 23-08, p. 168.
1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2023.3.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358#pressRelease〉 (검색일: 2024.6.28).
129) 이경희, "북한의 두 국가론, 민족부정론에 대한 반박 및 대응 논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문자료, 2024.6.21.).

인류보편적 의제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인 북한의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V. 결론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유는 첫째, 남한과의 체제경쟁 실패를 자인 둘째, 북한 주도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불가능 셋째,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정세판단 넷째,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김정은이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남북한 체제경쟁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남북 간 체제경쟁이든 교류협력이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관계의 개선·발전이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군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 남한에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한 것이다. 이는 북한 주도로는 무력통일만 가능하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연계된다. 김정은은 전쟁을 굳이 피할 의사가 없으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통일해야 한다고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실패를 자인한 이상 북한 주도의 한반도 무력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북한 역사와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 등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논리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이 한국과 미국에게 있다는 책임전가와 자신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과 화해나 통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남북한 주민 대부분이 모두 한민족이라는 동일한 혈통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한순간에 부정한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취약하다. 한민족 부정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 적대감·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의존을 약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단된다.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 모두 역사적·현실적·논리적으로 매우 취약

하기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적·현실적·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박의 논리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은 반통일적이고 역사적 착오이자 자기부정적 모순이다. 비록 분단된 상황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 간 관계의 단절은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일 뿐이다.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 한국과 미국에게 책임전가할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정책적, 정세적 판단의 오류를 인식해야 한다. 분단체제로 인한 다양한 폐해와 모순들로 인해 남북 주민 모두 상호 적대성과 폭력성을 지닌 악순환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형태의 특수관계로서 남북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 담론의 의제화를 추구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억제와 평화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함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고, 한민족 디아스포라와의 유대와 연대 강화를 통한 단일한 한민족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전파해야 하며, 초국적 평화구축 이슈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표 V-1>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이유, 반박, 대응방안

배경 및 이유	반박	대응방안
①남한과의 체제경쟁 실패 자인 ②북한 주도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불가능 인식 ③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이 북한에게 불이익 ④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심화	①반통일, 한민족 부정은 역사적 착오이자 자기부정이다 ②관계의 차단은 고립 자초할 뿐이다 ③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해 책임 전가 말라 ④반통일은 적대성과 폭력성을 노정하고 있다 ⑤특수한 남북관계 그 자체로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	①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 재확인 ②자유, 평화,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는 통일담론 주도 ③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 담론 의제화 추구 ④군사적 긴장 억제와 평화관리 노력 강화 ⑤북한 주민 대상 통일의식 함양 방안 마련 ⑥한민족 디아스포라와의 유대와 연대 강화 ⑦초국적 이슈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방안 마련

출처: 저자 정리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민족 부정론은 대남·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전환을 꾀하는 목적이 강하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가 전환되는 시점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단기 전술적 변화의 성격이 아닌 장기적 대결국면을 상정한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그들이 규정한 '신냉전'으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실이 지속될 것이라는 냉정한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들 나름의 합리적 판단 속에서 진행한 전략적 변화의 형태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2019년 미국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제정세 변화 속에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후 약 5년 동안 북한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누적된 변화가 '두 국가론'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북한이 단순히 전술핵을 앞세운 대남 군사행동 언급과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2024

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를 바라보고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집중하려고 헌법에 영토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은 단순히 전술적 변화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선대 업적과 성과까지 부정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남북관계로는 기대할 이유나 희망이 없고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생존과 국가 발전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히 전술적 변화의 측면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전술적 변화의 측면보다는 근본적인 전략적 변화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두 국가 선언에 대해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Ⅳ장에서 언급한 정책적 방안들이 단기간 처방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정책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현재 비록 일시적으로 남북 간 분단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통일되어 평화적인 한반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한민족의 염원이자 소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가안보실.『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14.

국방부.『국뱅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국방부.『200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5.

국방부.『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국방부.『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국방부.『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조용신·조현주·김민지. 『2023 통일의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김석향. "남북 간 사회문화 분야의 신뢰 형성: 현황과 과제."『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기획. 서울: 선인, 2013.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발간위원회.『통일 여론·동향(2024년 1분기)』. 통권 제37호.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24.

박찬승 외.『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 서울: 한국사회학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국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2009.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형숙 역.『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2.

신기욱 저. 이진준 역.『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파주: 창비, 2009.

오오다케 코지 지음. 윤인로 옮김.『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부산: 산지니, 2020.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2023 지구촌 한류현황』. 서울: 외교부, 2023.

외교부.『2022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외교백서)』. 서울: 외교부, 2023.

이남주·이정철.『신한반도체제 추진 종합연구(2): 신한반도체제의 평화협력공동체 형성』.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이무철 외.『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KINU 연구총서 23-08. 서울: 통일연구원, 2023.

이상신 · 민태은 · 박주화 · 이무철 · 윤광일 · 구본상.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요약보고서』. 통일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24.
장철운 · 김상범 · 김차준 · 이기동.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2021.
조봉현.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간 신뢰 형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기획. 『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 서울: 선인, 2013.
카를 슈미트 저. 나종석 옮김.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서울: 길, 2012.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9.
통일부. 『202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23.
Aviel Roshwald. *The Endurance of Nationalism: Ancient Roots and Modern Dilemm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München: Duncker & Humblot, 2017.
Ernest Renan. translated & edited by M. F. N. Giglioli. "What is a Nation?." *What is a Nation?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Eric Nelson. *The Hebrew Republic: Jewish Sources and the Transf ormation of Europea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Fred Rosen. "Liberalism and Nationalism." *Bentham, Byron and Greece; Constitutionalism, Nationalism, and Early Liberal Political Thou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Friedricch Meinecke. *Weltbürgertum und Nationalstaat.*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69.
Graham Hammill. *The Mosaic Constitution: Political Theology and Imagination from Machiavelli to Milt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 and Background.* New York: Macmillan Publishers, 1944.
Hans Kohn.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Princeton: D. Van Nodstrand Company, 1955.

Hannah Arendt.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Cleveland: Meridian Book, 1958.

Han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Penguin, 1963.

Isaac Nakhimovsky. *The Holy Allianc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ed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4.

Jörn Leonhard. edited by Cathie Carmichael, Matthew D'Auria & Aviel Roshwald. "Liberalism and Nationalism: Trajectories of an Entangled Relationship." *The Cambridge History of Nationhood and Nationalism: Vol. II, Nationalism's Fields of Inter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John Locke. edited and with and Introduction by Mark Goldie.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and Other Writings.* Indianapol is: Liberty Fund, 2010.

Jeffrey R. Collins. "Locke and Catholicism: The 'Roman Leviathan'." *In the Shadow of Leviathan: John Locke and the Politics of Con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Karl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1. The Spell of Plato.*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1945.

Karl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2. The High Tide of Prophecy: Hegel, Marx, and the Aftermath.*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1945.

Michael Billig. *Banal Nation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1995.

Michalis Sotiropoulos. *Liberalism after the Revolution: The Intelle ctual Foundations of the Greek State, c. 1830-1880.* Cambri 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Rogers Brubaker. ""Civic" and "Ethnic" Nationalism." *Ethnicity wit hout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2. 논문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이무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이헌경.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신기능주의적 접근.”『통일문제연구』. 8권 1호, 1996.

조현성. “북한 내 한류 현상 연구의 현재와 미래.”『현상과 인식』. 47권 3호, 2023.

Dong-ho Han & Yeowon Lim. “The Rise of Ethnic Nationalism in South Korea: Moon’s North Korea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Asian Perspective.* Vol. 47, No. 2, 2023.

Ivan Ktrastev & Stephen Holmes. “Explaining Eastern Europe: Imit ation and Its Discontents.” *Journal of Democracy.* Vol. 20, No. 3, 2018.

Ken Wolf. “Hans Kohn’s Liberal Nationalism: The Historian as Pro phe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7, No. 4, 1976.

Malachi Haim Hacohen. “Dilemmas of Cosmopolitanism: Karl Popper, Jewish Identity, and “Central European Culture”.”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71, No. 1, 1999.

Malachi Haim Hacohen. “Berlin and Popper between Nation and Empire: Diaspora, Cosmopolitanism and Jewish Life.” *Jewish Historical Studies.* Vol. 44, 2012.

William Selinger. “The Politics of Arendtian Historiography: European Federation and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Modern Intellectual History.* Vol. 13, No. 2, 2016.

Yael (Yuli) Tamir. “Not So Civic: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Ethnic and Civic Nationalism?.”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2, 2019.

3. 북한자료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4. 기타자료

『서울신문』.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SPN서울평양뉴스』.

글로벌 파이어 파워 〈https://www.globalfirepower.com〉.
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영국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 〈https://www.henleyglobal.com〉.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https://dialogue.unikorea.go.kr〉.

강인덕. "특별대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통일연구원 통일 대토론회(2024.5.14.) 원로대담." 『통일연구 브리프』. 2024.05-06 Vol. 4. 서울: 통일연구원, 2024.
김갑식·장철운. "북한 최고지도부의 '23년 12월~'24년 2월 공개활동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20, 2024.
김갑식·장철운. "북한 최고지도부의 '24년 3~5월 공개활동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40, 2024.
김천식. "권두칼럼: 통일 기본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준비하자." 『통일연구 브리프』. 2024.05-06 Vol. 4. 서울: 통일연구원, 2024.

성기영.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와 분석 및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ISSUE BRIEF』. 제566호, 2024.
이봉기. “동독의 2국가 2민족론의 전개 과정과 배경.”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39, 2024.
장철운.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 가능성 검토.”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02, 2024.
홍민. “김정은의 중요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 및 240mm 신형방사포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35, 2024.
강혜석. “북한의 두 국가론, 민족부정론에 대한 반박 및 대응 논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문자료, 2024.6.5.
이경희.“북한의 두 국가론, 민족부정론에 대한 반박 및 대응 논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문자료, 2024.6.21.
이승열. “북한의 두 국가론의 전략적 의도와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문자료, 2024.6.21.
성기영. “북한의 2개 국가론에 대한 반박 및 대응 논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문자료, 2024.5.31.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Ⅰ: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Ⅱ: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의식조사 2022 박주화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 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 Study Series ■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2023-01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전병곤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통일정책연구, 제33권 1호 (202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3, No. 1 (2024)

기 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통일연구원

비매품/무료
93340

9 791165 891749

ISBN 979-11-6589-174-9